연 구 논 문

대한민국임시정부 초기 위임통치 청원논쟁

오 영 섭*

1. 머리말
2. 위임통치청원서의 작성 · 제출 경위 및 그 관련자들
3. 위임통치청원서의 내용과 독립화 방안
4. 위임통치청원을 둘러싼 독립운동 세력 간의 갈등 양상
5. 맺음말

1. 머리말

3 · 1운동으로 분출된 한국인의 독립의지가 확산되어 가던 1919년 3~4월 사이에 국내외 각지에 임시정부가 수립 · 선포되었다. 3월 17일에 노령에서 대한국민의회가 성립을 선포한 이래, 4월 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고, 4월 23일 국내에서 한성정부가 선포되었다. 이외에 전단이나 신문 등을 통해 수립 사실이 알려진 정부들도 여럿 있었다. 이 중에서 한국독립운동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임시정부는 중국 상해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정)이다.[1)]

*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임정은 국가 구성의 3대 요소인 영토·주권·국민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국땅 상해의 프랑스령 조계지에 수립된 망명정부였다. 임정은 출범 초부터 구성원들의 노선차이, 지역파쟁, 세대차이, 방만한 조직 등으로 인해 통일성·단합성·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임정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민주공화제를 본격적으로 표방한 민주정부였을 뿐 아니라 국내외 각지에 산재한 여러 독립운동단체들의 지도단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임정은 한민족의 독립운동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2)]

임정 초기에 임정 내 독립운동세력들은 상호간에 노선투쟁과 패권경쟁을 벌였다. 이들은 외교투쟁·실력양성을 앞세우는 완진론과 무장투쟁·의열투쟁을 중시하는 급진론으로 갈라진 독립방략의 차이, 기호파·서북파·북도파로 구분되는 지역적 파쟁, 재정곤란을 타개하기 위한 독립자금 확보경쟁 등 여러 문제를 둘러싸고 협력적·적대적 경쟁관계를 보였다.[3)] 조선시대 당쟁과 흡사한 임정 초기 독립운동세력들의 대립양태는 거시적으로 근대적 정당운동의 서막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미시적으로 한국독립운동의 역량과 발전을 저해한 부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임정 초기에 독립운동진영의 노선투쟁과 패권경쟁 과정에서 돌출된 대표적 사건은 이승만(1875~1965)이 국제연맹에 한국의 위임통치(mandate; mandatory rule)를 맡아주도록 주선해 달라고 윌슨 미대통령에게 청원한 문제이다.[4)] 당시 독립전쟁론을 주창한 임정 내 이동휘세력, 하와이와 원

---

1)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해서는 한국근현대사학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 기념논문집』, 상·하, 국가보훈처, 1999 참조.

2) 오영섭, 「이승만의 대한민국임시정부 통치구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1, 2009.

3) 『한국민족운동사료 : 중국편』,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76, 350~364쪽.

4) 임정 초기 위임통치청원론에 대한 연구로는, 양영석, 「위임통치청원(1919)에 관한 고찰－그 비판과 반론」, 『한국학보』 49, 1987, 102~122쪽 ;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005, 124~130·146~160쪽 ; 방선주, 「이승만과 위임통치안」,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189~227쪽 ; 고정휴, 「독립운동기 이승만의 외교노선과 제국주의」, 『역사비평』 31, 1995년 겨울호, 139~144쪽 ; 長

동의 박용만세력, 북경 · 만주 · 노령 지역의 일부 독립단체들은 이승만이 미국정부에 한국의 위임통치를 청원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5] 이들은 위임통치 청원행위가 한국인의 독립정신을 크게 훼손한 것이며, 구미 열강의 침략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친미적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신채호는 "이승만은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역적이다"며 이승만을 강력 비판했다. 위임통치청원에 대한 비판적 반응은 이승만이 정력적으로 추진한 외교독립활동의 성과를 전혀 무시하고, 임시정부의 내분과 혼란의 모든 책임을 이승만에게 돌림과 동시에, "이승만이 미국에 위임통치를 청원한 사실 말고 독립운동계에 특별히 공헌한 것이 있느냐"는 가혹한 비판으로 이어졌다.[6]

그러나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은 1910년대 말경 한국실정과 국제정세를 다각도로 고려한 '현실적인 차선책'이라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 주지하듯이 이승만은 3 · 1운동 직전인 1919년 2월 25일 병상에서 위임통치 청원서에 서명하여 3월 3일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여기에는 한국의 즉각적 독립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하여 "장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분명한 전제 조건 하에 한국을 일정 기간 동안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아래 두어달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아울러 위임통치 기간 동안 한국은 중립적 지위를 누리며 내치와 통상의 자유를 통해 실력을 배양함으로써 자주독립의 기반을 확고히 닦자고 하는 그 나름의 독특한 단계적 · 점진적인 독립구상이 담겨있었다. 이런 점에서 위임통치청원론은 이승만의 외교독립운동의 정수에 해당하며, 근대기에 한국인들이 구사한 외교구국방략의 완결판이라고 평할 수 있다.

田彰文, 『日本の朝鮮統治と國際關係－朝鮮獨立運動とアメカ』, 동경 : 平凡社, 2005 (나가타 아키후미 저, 박환무 역, 『일본의 조선통치와 국제관계』, 일조각, 2008, 150~158 · 167~185쪽) ; 손세일,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청원」, 『이승만과 김구』 1-3, 나남, 2008, 389~428쪽 ; 홍용표, 「이승만의 대외인식과 임시정부 초기 독립외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현대사적 성찰』, 나남, 2010, 397~427쪽 참조.

5) 양영석, 「위임통치청원(1919)에 관한 고찰」, 110~114쪽.

6) 笑公, 「李承晩君에게 一言을 與하노라」, 『독립신문』 1925년 3월 31일.

이 논문에서 필자는 “위임통치청원은 이완용의 매국행위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서 한국의 독립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고 우국충정의 소산물이었다”[7]는 선학의 긍정적 시각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위임통치 청원문제를 깊이 분석해 보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승만과 김규식(1881~1950)이 위임통치청원서를 작성 · 제출한 경위를 알아보고, 이승만 · 정한경(1890~1985) 청원서와 새로 발굴한 김규식 청원서의 내용을 비교 검토한 다음, 이승만 · 정한경 청원서와 김규식 청원서에 담긴 궁극적인 독립구상을 파헤쳐 보려 한다. 마지막으로 위임통치청원에 대한 반이승만세력의 비판과 친이승만세력의 반박을 살펴보려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서가 이승만 · 정한경의 단독 작품이 아니라 안창호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의 합작품이며, 신한청년당 대표로 파리에서 활동한 김규식도 이승만 · 정한경 청원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한 사실을 논급하려 한다. 이로써 국제연맹 출범기에 각기 미국과 프랑스에서 외교독립운동을 펼친 온건성향의 유력한 한국인들이 위임통치청원을 독립방략의 일단으로서 공유한 사실을 강조하려 한다. 나아가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이 “사실상 주체적 독립운동 부정론이었다”거나 “한국인들에게는 독립운동 무용론, 외세의존적 허무주의에 가까운 것이었다”는 학계 일각의 비판론을 재검토하려 한다.[8] 마지막으로 임정 초기의 위임통치 청원논쟁은 임정과 이승만에 대한 반임정 · 반이승만세력의 사상공격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격화일로를 걷게 되었음을 밝힘과 동시에, 그 청원서의 내용과 성격이 제대로 검토되거나 알려지지 못한 상태에서 수시로 독립운동계의 패권다툼의 소재로 활용되었음을 겸하여 설명하려 한다.

---

7) 방선주, 「이승만과 위임통치안」, 226쪽.

8)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129~130쪽.

2. 위임통치청원서의 작성 · 제출 경위 및 그 관련자들

1918년 11월 11일 독일의 패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전후문제 처리를 위해 이듬해 1월 18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Paris Peace Conference)가 열리게 되었다. 미국대통령 윌슨이 주창한 14개조의 평화조건 중에서 제5조의 민족자결주의에 고무된 한인들은 국제사회에 독립청원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들은 강화회의에서 국제연맹의 창설과 패전국의 식민지 독립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한국독립운동에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하고 싶어했다.[9]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주의 대한인국민회, 상해의 신한청년당, 러시아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국내의 유림계가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려 하였다.

파리강화회의 주도국들과 그 대표들에게 전달 · 제출하기 위해 파리강화회의 대표파견에 관여한 단체나 지명인사들은 수많은 문건을 만들어 냈다. 이들이 작성 · 제작한 문건은 서한 · 청원서 · 메모 · 팜프렛 등 다양하다. 여기에는 일제의 강압적 한국통치를 규탄하고 한국과 한국민의 억울한 실정을 호소함으로써 독립을 되찾으려 했던 독립지사들의 염원이 담겨있다. 그런데 당시 생산된 문건들 가운데 오늘날까지도 논란거리로 남아있는 것은 1919년 2~4월에 작성된 위임통치청원서이다.

이제까지 파리강화회의와 윌슨대통령에게 제출한 위임통치청원서로는 1919년 2월 25일자 이승만 · 정한경의 청원서만이 알려져 왔다. 그런데 이승만만이 아니라 신한청년당 대표로 파리에서 활동한 김규식도 이승만 · 정한경의 청원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문건을 강화회의에 보낸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승만 · 정한경의 청원서는 이승만에 적대적인 박용만파가 미국 신문에 보도된 청원서의 골자를 미주와 원동 각지에 전보로 널리 퍼트림으로써 세상에 알려져 논란이 되었던 반면, 김규식의 청원서는 근

9) 홍선표, 「1920년대 유럽에서의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7, 2006, 423~424쪽.

자에 이르러 영문 청원서의 일부 구절만이 소개되었을[10] 뿐 정작 영문 청원서 全文이나 국한문 청원서는 전혀 공개된 적이 없었다.[11] 이제 상호간에 연락이 없던 상태에서 약 40일간의 시차를 두고 각기 미국과 파리에서 위임통치청원서가 작성·발송된 경위와 그 관련자들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먼저 이승만·정한경 청원서의 작성·발송 경위 및 그 관련자들을 알아보겠다. 1918년 11월 25일 대한인국민회(총회장 안창호)는 이승만·민찬호·정한경 3인을 파리강화회의 및 소약국동맹회 한인대표로 택정하되, 파리대표로는 정한경을 보내기로 하였다.[12] 이승만은 12월 3일 국민회 중앙총회 임시회의에서 지지자들의 항의와 윌슨과의 친분이 고려되어 파리대표로 추가 선정되었다.[13] 이어 이승만·정헨리(정한경)·민찬호 3인의 서명이 들어있는 1918년 11월 25일자 청원서, 즉 이승만·정한경이 작성한 1919년 2월 25일자 위임통치청원서의 모본에 해당하는 청원서가 12월 미상일에 윌슨대통령에게 보내졌다. 이승만이 하와이에 머물다가 1919년 1월 15일에야 샌프란시스코항에 당도한 사실을 감안하면,[14] 1918년 11월 25일자 청원서는 정한경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15]

뉴욕주재 일본총영사로부터 파리행 여권발급을 거부당한 이승만과 정한경은 1919년 1월 중순부터 뉴욕과 워싱턴을 오가며 미국정부로부터 여권을 얻고자 노력했다.[16] 이들은 2월 2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서재필을 만

---

10) 나가타 아키후미 저, 박환무 역, 『일본의 조선통치와 국제관계』, 173~174쪽.

11) 독립기념관에 소장된 국한문 청원서 「한국위원이 講和會에 제출한 13개조」(1919.4.3)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李明花 책임연구위원의 厚意로, 그리고 미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Wilson Papers, Microfilm, Reel No.339에 들어있는 3쪽 분량의 영문 청원서 "To The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1919.4.5)는 일본 상지대 법학부의 나가타 아키후미 교수의 厚意로 입수했다. 지면을 빌어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12) 『신한민보』 1918년 11월 28일자 「호외」.

13) 『신한민보』 1919년 1월 16일자 「논설」.

14) Syngman Rhee, *Log Book of S. R.*, 1919년 1월 6~16일.

15) 방선주, 「이승만과 위임통치안」, 209쪽. 윌슨대통령에게 보낸 1918년 11월 25일자 청원서에는 이승만·정한경·민찬호 3인의 서명이 들어 있는데, 이승만의 서명은 친필 서명이 아니라 제3자가 서명한 것이다.

나 일본의 방해와 미국의 무관심으로 파리행이 어렵게 되었음을 논하며 대책을 숙의했다.[17] 이때 이승만은 "파리행은 무모한 일이니 그만두고 영문잡지를 간행하자"는 서재필의 제안을 뿌리치고 강화회의 대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18] 그는 정한경에게 신문과 잡지에 한국사정과 한국민의 희망이 담긴 글을 기고하라고 권하는 한편, 머지않아 파리에서 귀국할 윌슨대통령을 직접 만나 한국독립을 청원해 보겠다고 하였다.[19] 사실상 이때부터 윌슨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운동이 구체화되고 있었다.

2월 5일 이승만은 정한경으로 하여금 국민회 중앙총회장 안창호에게 경과보고를 하도록 하였다. 정한경은 미국정부가 여권 발급을 거절하여 대표단의 파리행이 사실상 비관적인 상태라며 선택 가능한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캐나다를 경유해 조용히 프랑스로 들어가거나, 둘째, 파리행이 좌절될 경우에 친한파 미국인 헐버트(Homer B. Hulbert)에게 파리강화회의에 한국문제를 대신 제출하게 하거나, 셋째, 이상의 방책들이 어려우면 2월 중순에 돌아오는 윌슨대통령을 만나 한국사정을 직접 호소하거나 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안창호는 제3책이 써볼만 하다는 회신을 보냈다.[20] 8일에 이승만은 워싱턴 요양원에 입원하여 피부병 치료를 받으며 3주간을 보냈는데,[21] 이때 정한경과 연명으로 문제의 1919년 2월 25일자 위임통치청원서를 작성하여 윌슨대통령과 파리강화회의에 보냈다.

위임통치청원서 작성·서명 전후에 이승만은 윌슨대통령을 대상으로 한국독립을 호소했다. 2월 11일에 윌슨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25일 튜멀티(Joseph P. Tumulty) 비서실장으로부터 대통령이 공무로 여유가 없다

16) 손세일,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청원」, 396~397쪽.
17) *Log Book of S. R.*, 1919년 2월 1~3일.
18) *Log Book of S. R.*, 1919년 2월 5일.
19) 이승만, 「旅行記大略」, 姜德相 편, 『현대사자료25 : 조선(1)』, 동경: みすず書房, 1965, 443~446쪽.
20) 『신한민보』 1919년 3월 13일자 「호외」.
21) 『신한민보』 1919년 3월 29일자 「논설」

는 회신을 받았다. 23일에 윌슨에게 편지와 첨부 문건을 보냈으나 윌슨은 이를 국무성에 넘겨 처리하게 하였다.[22] 또 25~26일 양일간 레인(Franklin K. Lane) 내무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했지만, 미국정부의 기본방침은 한국대표가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다.[23] 28일에 튜멀티에게 "한국민도 윌슨대통령이 주창한 민족자결주의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파리행을 위한 특별 허가증을 발급하여 강화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고,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따라 미대통령이 居中調停(good offices)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3월 3일 윌슨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서한에서도 이승만은 1882년 조미조약에 의거하여 한국의 독립을 지켜줄 것을 역설했다.[24]

줄기찬 파리행 외교활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승만은 다음 단계로서 위임통치청원서를 직접 윌슨대통령에게 제출했다. 3월 3일 문제의 청원서가 동봉된 편지를 튜멀티 비서실장에게 보내 "150만 해외한인을 대표하는 국민회의 대표인 자신에게 대통령을 면담하고 동봉한 청원서를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국민에게 약소국의 지원자로 알려진 윌슨을 만나는 것은 민족자결주의에 고무된 한국민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1882년 조미조약의 거중조정 조항에 따라 한국을 도와달라"고 하였다.[25] 마지막으로 편지 말미에 동봉한 청원서를 국무부로 보내지 말고 자신에게 바로 돌려달라고 적었다. 이는 이승만이 위임통치청원서를 미국정부가 아니라 윌슨 개인에게 직접 제출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튜멀티는 윌슨이 파리행 준비에 바빠서 이승만을 접견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26]

1919년 1월 중순부터 두 달 이상 이승만과 정한경은 미국정부와 윌슨

---

22) 유영익 · 오영섭 등 편, *The Syngman Rhee Correspondence in English, 1900~1948*, Vol. 2, 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2009, pp. 204~206.

23) *Log Book of S. R.*, 1919년 2월 25~26일.

24) *The Syngman Rhee Correspondence in English, 1900~1948*, Vol. 1, pp. 72~73.

25) *The Syngman Rhee Correspondence in English, 1900~1948,* Vol. 1, p. 74.

26) *The Syngman Rhee Correspondence in English, 1900~1948,* Vol. 2, p. 207.

대통령을 상대로 파리행 여권 취득활동과 한국독립 호소활동을 벌였으나 여의치 못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운동방식을 바꾸어 3월 16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자신들이 윌슨대통령에 보낸 「한국위임통치 청원서」를 각 신문에 보도케 하였다. 또 바야흐로 전개되고 있는 독립만세시위에 가혹행위가 없도록 미국과 영국정부가 일본에 압력을 가해줄 것을 요구했다.[27]

이승만 등의 요청에 따라 『뉴욕 타임즈』는 17일자로 "대한인국민회는 윌슨과 파리강화회의에 대해 한국이 완전한 자치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될 때까지 국제연맹이 한국을 위임통치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28] 『엘파소 헤럴드』는 3월 17일자 신문에 『뉴욕 타임즈』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여 일제의 3·1운동 탄압기사를 실었다. 아울러 3월 17일자 하와이 영자신문 *The Pacific Commercial Advertiser* (『태평양상업신문』)는 본토에서 날아온 전보를 근거로 이승만이 위임통치청원을 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또한 정한경은 친일성향의 스펜서(Spencer) 선교사가 3월 20일자 『뉴욕 타임즈』에 "한국은 자치능력이 없어 일본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하자 그 다음날 같은 신문에 스펜서의 주장을 논박하며 "한국 모든 계층의 인민들은 한마음으로 파리강화회의와 서방 언론에 대해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였다.[29] 이어 그는 『아시아』 잡지 5월호에 「금일의 한국－일본 식민정책에 대한 어떤 한국인의 견해」라는 글을 발표했다. 여기서 그는 한국민을 공정하게 대하고 있다는 일본의 주장이 진실한 것임을 입증하려면, 일본은 한국에 ① 완전독

---

27) *The New York Times*, 1919년 3월 17일자, "Koreans Petition Wilson."

28) *New York American*, 1919년 3월 17일자, "Koreans Petition Wilson." "President Wilson has been asked by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to initiate action at the Peace Conference looking to independence for Korea, with the country to be guided by a mandatory until such time as the League of the Nations shall decide that it is fit for full self-government."

29) *The New York Times*, 1919년 3월 21일자.

립, ② 자치, ③ 최소한의 참정권 등 3가지 중에서 하나를 허용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30]

정한경이 내세운 자치론이나 참정권 허용 요구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고문정치나 후견정치를 상정한 상태에서 일본으로부터 자치나 참정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3·1운동 후 고희준·민원식 등이 각기 제기한 일본의 시혜조치만을 바라는 단순한 자치론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고희준·민원식 등의 자치론은 한일 양민족의 융합을 통해 세계적 생존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강구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서 장래 한국 민족국가의 완전독립을 상정하지 않은 친일적 자치론이었다.[31] 이에 반해 정한경의 자치론은 자치를 통해 영세중립국 체제와 흡사한 정치체제를 운영하면서 미래 어느 시점에 한국의 완전독립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러면 1919년 2월 25일자 이승만·정한경의 위임통치청원서가 작성·발송되는 과정에 관련된 인사들을 알아보겠다. 기왕에는 정한경·민찬호가 1918년 11월에 작성한 청원서를 병상의 이승만이 자구만 약간 수정한 다음 여기에 위임통치청원 문구를 삽입하여 제출했다고 알려져 왔다.[32] 따라서 두 사람만이 청원서 작성에 관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청원서의 작성·발송 과정에는 이승만·정한경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관여했다. 1921년 봄－여름경 위임통치 청원문제가 독립운동계의 논란거리로 떠오르자 정한경은 자신을 비판하는 현순에게 반박서한을 보냈다. 여기에는 기왕의 이해를 다소 보완·수정해주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 한 장은 1918년 11월 25일에 윌슨대통령에게 보냈고, 한 장은 동년 12월 10일에 합중국 상원의원에게 보낼 때에, 나는 한국과 중국에 있는 유력한 친우들과 여러 萬國公法 율사들의 의향을 참작하여 가장 편리한 것을 따라 윌슨대통령께 보낸 것이라. 각하(현순:필자)가 기억하는 바와 같

30) Henry Chung, "Korea Today—A Korean View of Japan's Colonial Policies," *ASIA*, Vol. 19, No.5, 1919.5, p. 467 ; 방선주, 「이승만과 위임통치안」, 222쪽, 각주 27)에서 재인용.
31) 이태훈, 『일제하 친일정치운동 연구』, 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제5장 참조.
32) 방선주, 「이승만과 위임통치안」, 219쪽.

이 이는 독립운동이 발생하기 이전의 일이라. 그때에 미주나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인들이 일인의 관할을 만족하게 여기는 줄로 생각하여 독립이라는 말은 입에도 올리지 못하는 줄로 알고 있었다.

(그때) 모든 권고를 받는 가운데 중국정부의 정치고문으로 있는 젠크씨는 우리가 먼저 미국대통령에게 한국이 현금 일인의 관할에서 벗어나서 불원간 완전독립을 확실히 담보함으로 국제연맹회 위임 하에 두기를 청원하라고 권고하였다. 이는 그때에 미국대통령이 국제연맹회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권고를 미국의 유명한 이들과 중국과 한국의 여러 친우들에게 받았고, 또 나는 그때에 국민회 회장 안창호씨에게 편지를 하였소이다.

각하와 내가 일체로 국민회 대표원이 된 고로 하와이 지회까지 포함된바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두령 되는 주임자와 의론하는 것이 마땅하겠기에 내가 어떻게 할 것과 미국 친우들의 의향이 포함된 회답을 받은 중 안창호 씨가 행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을 결정 처리한지라. 국민회 임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을 작정하였으니 곧 한국이 일본의 관할에서 벗어나서 불원간 완전독립을 확실히 담보함으로 국제연맹회 위임통치 하에 두기를 청원하라는 공함이 온지라. 나는 즉시 가서 청원서를 준비하였으니 기록된 일자와 같이 이는 독립운동이 개시되기 전이라.[33]

위 사료를 통해 1) 중국정부 정치고문을 지낸 젠크(Jeremich W. Jenks)[34]가 1918년 12월 중순경부터 정한경에게 한국이 일본 통치에서 벗어나 완전독립을 확실히 담보하는 조건으로 국제연맹에 위임통치를 청원하라고 권고했으며,[35] 2) 정한경이 위임통치청원서의 초본을 작성할 때에 미국

33) 『우남이승만문서 : 동문편』 8, 「뎡한경씨의 편지」(1921.5.28), 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1998, 317쪽.

34) 젠크(1856~1929)는 미시간대 졸업 후 독일로 유학하여 1885년에 Halle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법학을 공부하고, 1891년부터 코넬대학과 뉴욕대학의 교수를 지냈다. 그는 경제문제의 정치적 측면에 관심이 많았으며, 미국 여러 정부의 위원회에 참여하여 통화, 노동, 이민 문제 등에 관한 많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멕시코, 니카라과, 독일, 중국 정부의 재정정책 문제를 자문했으며, 1904년에 북경을 방문했다. 저서로 *The Trust Problem* (1900), *Principles of Politics* (1909), *The Immigration Problem* (1911) 등을 남겼다.

35) 1919년 초 미국에는 아르메니아 신탁통치를 미국이 수락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가

의 유력인사, 한중 양국의 유력한 친우들, 그리고 국제법 전문가들로부터 권고를 받았으며, 3) 위임통치청원서를 작성·발송하기 전에 미국 친우들과 파리강화회의 대표단 책임자인 국민회 중앙총회장 안창호의 의향을 타진했고, 4) 안창호는 국민회 중앙총회 '행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임통치 청원문제를 논의·승인한 후 승낙서를 정한경에게 공문으로 보냈으며, 5) 이상의 과정과 절차를 모두 끝마친 후 국제법 전문가인 이승만의 최종 검토·수정작업을 거쳐 양인이 서명했음을 알 수 있다.

위임통치청원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이승만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위임통치청원 비판운동이 일어나자 이승만은 여러 차례 "마지막 청원서를 보낼 때에 서명만 했다"고 하였다.[36] 그러나 이는 자신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보신책으로 보이며, "1918년 11월 정한경·민찬호의 청원서에 약간의 자구 수정만 하고 이승만이 자신의 위임통치청원 구절을 삽입했다"는 해석[37]이 타당해 보인다. 이승만은 정한경이 젠크를 비롯한 국제법 전문가들의 권고와 자문을 받아 작성한 초안을 다듬고 수정한 다음, 자신의 지론을 가미하여 위임통치청원서를 최종 완결지었던 것이다.[38] 위임통치청원서의 핵심 구절이 이승만의 박사학위논문에 나타난 외교독립론의 정수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위에서 살펴본 정한경의 주장과 이승만의 역할을 음미해 보면, 위임통치청원서의 작성과 발송 과정에는 젠크·이승만 및 익명의 국제법 전문

분분했기 때문에(프란크 볼드윈, 「윌슨, 민족자결주의, 3·1운동」, 『3·1운동50주년 기념논문집』, 동아일보사, 1969, 520쪽) 이승만·정한경 등이 미국의 국제법 대가들과 한국의 위임통치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36) 『독립신문』 1921년 2월 26일자 「대통령담」; 유영익·송병기·이명래·오영섭 편, 『이승만 동문 서한집』 상, 이승만→신규식(1921.7.6), 이승만→장붕(1921.7.16), 연세대 출판부, 2009, 45·145·170쪽.

37) 방선주, 「이승만과 위임통치안」, 219쪽.

38) 현순은 「華盛頓外交實記」 제4장에서 "정한경이…어떤 미국인을 보고 대한 사정을 말하여 그의 권고로 소위 위임통치청원서를 작성하여 이승만과 같이 서명하여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하였다.

가들, 이승만 · 정한경의 미국 · 중국 · 한국인 친우들, 국민회 중앙총회장 안창호와 그 임원들이 두루 관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용문에 나오는 "위임통치청원서 발송을 허가한 안창호의 공문을 자신이 갖고 있다"는 정한경의 누차에 걸친 공개적 주장에 대해,[39] 안창호는 말할 것도 없고 안창호에 우호적인 국민회 · 『독립신문』 · 『신한민보』 등이 한 번도 이를 정식으로 논박한 적은 없었다. 이를 보면, 이승만 · 정한경의 위임통치청원서 작성 · 발송 과정에 미주 독립운동계의 양대 산맥인 이승만계와 안창호계가 모두 관여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음으로 김규식 청원서의 작성 · 발송 경위 및 그 관련자들을 알아보겠다. 미국의 윌슨대통령은 파리강화회의에 중국대표의 참석을 권유하기 위해 크레인(Charles R. Crane)을 특사로 파견했다. 1918년 중하순경 상해에 도착한 크레인은 각국 외교인사들이 베푼 만찬회에서 파리강화회의의 성격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 있던 여운형은 크레인을 만나 한국대표의 참가와 독립가능성을 문의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여운형은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함께 파리에 대표를 파견하기로 합의하고 11월 28일 신한청년당을 조직했다.[40]

신한청년당 대표 여운형은 파리강화회의와 윌슨 대통령에게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영문으로 작성된 1918년 11월 28일자의 독립청원서를 작성하여 피치박사의 수정을 받아 완성한 다음, 크레인 특사에게 주어 윌슨대통령에게 전하게 했다. 이 청원서는 미국의 역할 찬양, 일제의 한국탄압 비판, 한국의 정치적 · 경제적인 곤란상 등을 차례로 언급했다.[41] 이어 여운형은 청년당원들과 논의하여 파리강화회의에 한국대표를 파견하기로 하고, 미국 로녹대학 영문과 출신으로 영어에 능한 김규식을 대표로 선정했다.[42]

---

39) 『한국독립운동사 자료2』, 국사편찬위원회, 1973, 정한경→이광수(1921.6.13), 250쪽.
40) 김희곤, 『중국관내 한국독립운동단체연구』, 지식산업사, 1995, 76~77쪽.
41)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3, 탐구당, 1967, 304~309쪽.
42) 이기형, 『몽양 여운형』, 실천문학사, 1984, 288쪽.

신한청년당이 파견한 강화회의 대사 김규식은 1919년 2월 1일 상해를 떠나 3월 13일 파리에 도착했다. 그는 파리 시내 샤토당가 38번지 저택에 '강화회의 한국민대표단'(1919.4.13 이후 대한민국 주파리위원부)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외교활동에 들어갔다. 그는 서두에 '1919년 4월 파리'란 문구가 들어간 다수의 독립운동 관련 서한과 문건을 제작하여 5월경에 끌레망소 강화회의의장, 윌슨대통령, 로이드 조지 영국수상 및 각국 대표단에 연이어 전달했다. 이들 문건들 중에는 영어와 불어로 인쇄된 「독립공고서」가 가장 유명하다.[43]

김규식의 파리에서의 외교독립활동은 이관용 · 황기환 · 김탕 · 조소앙 · 여운홍 등이 1919년 5월 초 이후에 파리에 속속 당도함에 따라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3월 중순부터 4월경까지 김규식은 혼자서 외국인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주파리위원부의 모든 문서를 작성하고 사무를 관장해야만 했다. 당시에 김규식이 이승만본과 거의 동일한 위임통치청원서를 작성하여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한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김규식의 파리 도착 2주일 후인 3월 27일 '만국연합통신사' 전보를 통해 구미 각 신문에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 사실이 보도되었는데,[44] 김규식이 이 기사에 크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헐버트를 비롯한 외국인들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다. 그는 3월 17일 파리에 도착한 고종황제 외교특사 헐버트박사를 만나 많은 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헐버트는 을사늑약에 극력 반대한 고종황제가 『런던 트리뷴』지 기자인 스토리(Douglas Story)에게 의뢰하여 북경 주재 영국공사에게 전달한 1906년 1월 29일자 국서에서 5개년 간 열강에 한국 외교를 공동 보호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45] 당시 고종의 국서 원문은 1907년 1월 16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전문이 그대로 보

43) 이우진, 「임정의 파리강화회의 외교」, 『한불외교사』, 평민사, 1987, 136~137쪽.

44) 『우남이승만문서 : 동문편』 8, 「성토문」(1921.5), 295쪽.

45) 김기석 편, 『고종황제의 주권수호 외교』, 한국교육사고, 1994, 32쪽 ; 서영희,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 출판부, 2003, 233쪽. "皇帝게셔ᄂᆞᆫ 世界 各 大國이 韓國 外交을 同爲保護ᄒᆞᆷ을 願ᄒᆞ시고 限은 以五年 確定."

도되어 세간에 널리 알려졌을 정도였다.[46] 이는 한국 지도층이 최초로 열강에 한국 외교권의 공동 위임통치를 요청한 것으로서 이승만 · 김규식 등의 위임통치청원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 것이다. 아울러 헐버트가 김규식에게 한국을 위임통치 아래에 두어달라고 청원하도록 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 김규식은 중국인 교수 겸 사회운동가로서 파리주재 중국공사관 서기관으로 부임한 이유인(Li Yu-Ying), 파리강화회의 중국대표 王正延 · 李硬曾 등의 도움을 받아 파리위원부의 초기 정착에 힘썼다.[47]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김규식은 구미 신문에 보도된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 기사나, 혹은 미국인 헐버트박사와 중국인 이유인 · 왕정연 · 이경증 등의 측면 지원에 의지하여 위임통치청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때 김규식이 상황에 따라 큰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위임통치청원서를 작성할 때에 상해의 신한청년당 지도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쳤는가에 대해서는 자료 부족으로 알 수 없다. 다만 5월 이후 상해에서 파리로 건너와 파리위원부에 합류한 조소앙 · 여운홍 등의 독립운동가들은 김규식이 위임통치청원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았거나 아니면 국한문 청원서나 영문 청원서의 부본을 보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3. 위임통치청원서의 내용과 독립화 방안

1) 이승만 · 정한경본과 김규식본의 내용 비교

이승만 · 정한경의 위임통치청원서와 김규식의 위임통치청원서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다음과 같은 동이점과 특징이 있다.

먼저 형식면을 살펴보면, 첫째, 이승만 · 정한경의 1919년 2월 25일자

46) 『대한매일신보』 1907년 1월 16일.

47) 홍선표, 「1920년대 유럽에서의 독립운동」, 424~431쪽.

위임통치청원서는 영문으로 작성된 반면, 김규식의 위임통치청원서는 1919년 4월 3일자 국한문본과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한 4월 5일자 영문본 등 2점이 남아있다. 이때 김규식본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제13조가 국한문본과 영문본의 내용이 다소 다른 것은 청원서 접수자나 독자를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전자가 2쪽의 단일한 서한 형식의 문건인 반면, 후자는 국한문본의 경우 1쪽짜리 문건이며, 영문본의 경우 13쪽 분량의 「해방을 바라는 한국인들의 요구사항이 수록된 비망록」이란 문건 앞에 붙어있는 3쪽의 요약본이다. 본문의 분량은 전자가 후자보다 30% 정도 많은 편이며, 청원서의 논리적 일관성이나 정합성은 후자가 전자에 비해 떨어지지만, 위임통치청원의 주요 내용은 거의 동일한 편이다.

다음 내용면을 살펴보면, 첫째, 양자의 위임통치청원서는 전자가 윌슨대통령을 대상으로 작성된 반면, 후자는 윌슨대통령을 비롯한 강화회의 참석 대표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 이로 인해 전자에는 후자에 없는 미국의 인도주의, 기독교 찬양논리, 일제의 기독교 탄압의 비인도주의,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기대, 한국 독립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논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양자의 청원서는 공히 일본의 국제조약 위반과 불법적 한국병탄 정책을 비판하고, 한국의 자주성과 독립의지를 강조하고, 극동과 세계에서의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논급하고, 마지막으로 위임통치를 요청한 점에서 동일하다.

이승만 · 정한경의 위임통치청원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8] 이 청원서는 이승만 · 정한경 · 민찬호 3인이 작성하여 윌슨대통령에게 보낸 1918년 11월의 청원서에 비해 일부 구절이 약간 다르다.[49] 두

48) 논문 말미의 〈자료 1〉 참조.

49) 예컨대 1918년 11월 25일자 청원서와 1919년 2월 25일자 청원서의 일부 단락을 비교해 보면, 전자에는 "(상략)Japan took Korea, after the Russo-Japanese war, in violation of her treaty obligations to Korea. As your Excellency undoubtedly know, Korea formed an alliance (중략) Taking Korea as a prize of war was an act of betrayal on the part of Japan. (하략)"으로 되어 있는 반면, 후자에는 "(상략) Japan established her protectorate over Korea, after the Russo-Japanese war, in direct violation of her treaty obligations to Korea. It is a matter of diplomatic record that Korea formed an alliance

청원서는 모두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정책과 강제병탄 행위는 부당하며, 일본의 한국통치는 모든 면에서 한국인에게 최악이었고, 따라서 한국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므로 그 내용만을 가지고 말한다면 양자의 청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1919년 2월의 청원서에는 "분명한 독립을 전제로 한국을 당분간 새로 창설되는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아래에 두어 달라"는 한 단락의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다. 1919년 2월의 청원서는 총 9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제1~2단락은 서두이며, 나머지 7개 단락이 청원서 본문이다.

제3~5단락은 일본의 대한침략정책을 정치 · 경제 · 문화 침략 순으로 비판했다. 정치면에서 러일전쟁 당시 한국은 일본과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여 영토보전을 약속받고 일본을 후원했는데 전쟁 승리 후 일본은 조약을 파기하고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았다. 경제면에서 일본은 한국의 자원을 개발함에 있어 일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일본 기업과 상인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며, 일본인을 대거 이주시킴으로써 한국인의 산업 노예화와 경제적 몰락을 초래하였다. 문화면에서 일본은 한국의 역사 · 문화 서적을 불태우고, 신문 · 잡지를 폐간하고, 일본어를 공용어로 삼고, 한국의 역사 · 언어 · 지리 교육을 금압하고, 일본인 교사에게 한국 학교를 감독케 하고, 일장기와 천황 신패에 대해 경례를 강요하고, 구미 유학을 금지하고, 공공집회를 감시하고, 기독교를 금지하며 神道를 강요하고, 기독교 예배를 감시하고, 이른바 105인사건에 잘 드러난 것처럼 기독교를 혹독히 탄압했다.

제6~7단락은 한국민의 독립의지를 표명하며 거중조정을 당부하는 한편,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위한 위임통치를 요청했다. 한국민은 자치정부를 수립하고 정치적 독립을 이루려는 강한 열망을 품고 있다. 피지배 민

(중략) Taking Korea as a prize of war was a breach of covenant and of faith on the part of Japan. (하략)"라고 되어 있다. 이를 보면, 후자의 청원서가 일본의 국제법 위반을 다소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용표, 「이승만의 대외인식과 임시정부 초기 독립외교」, 같은 책, 414~415쪽.

족의 운명이 논의되는 파리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의 원칙을 강조하는 윌슨대통령은 한국이 독립하도록 거중조정을 해줘야 한다. 한국민은 "장래에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한국을 국제연맹의 위임통치하에 두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국제적인 중립적 통상지대로 변할 것이며,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는 완충국으로 남을 것이다. 주지하듯이 이 구절은 이승만의 독립운동의 성과나 성격 문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과 비판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두고두고 이승만의 정치적 권위를 크게 훼손한 아킬레스건이 되었다.[50]

제8~9단락은 한국이 독립을 획득할 자격이 있음을 강조하며 정의와 인도에 입각한 미국의 독립 지원을 호소했다. 한국은 연합국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연맹의 고려대상은 아니지만, 수천 명의 의용군이 러시아전선에 참여했고, 수많은 재미동포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인명과 자금을 제공했으며, 한반도에서 미국의 공업 · 상업 · 종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민은 1882년의 조미수호통상조약을 폐기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여일한 대미우호의식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민의 민족자결 열망을 도울 의무가 있으며, 미국의 국가이익 관철을 위해서라도 극동에서 일본의 침략을 저지해야 한다. 나아가 1,500만 한국민의 노예화는 세계민주주의를 해칠 것이므로 미국은 한국민에게 천부인권의 권리를 회복해 주고 자기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

다음, 김규식의 위임통치청원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1] 이

---

50) 정한경이 미국 신문기자들에게 말한 위임통치청원 구절도 위임통치청원서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The New York Times*, 1919년 3월 21일자, "Korea's Appeal." "Korea's appeal to the Peace Conference and to the enlightened public opinion of the West is to have Korea internationalized under the mandate of League of Nations with the guarantee of complete independence in the future. The accomplishment of this will convert the Korean Peninsula into a zone of neutral commerce to the benefit of all nations. It will also create a butter State in the Far East witch will help prevent aggrandizements by any single power and maintain peace in the Orient. This national reconstruction would eliminate the dangers which Japan faced when no international guarantee effectually maintained Korea's freedom."

51) 논문 말미의 〈자료 2〉 및 〈자료 3〉 참조.

청원서는 영문본의 경우 서두 부분을 제외하면 12개 조항이며, 국한문본의 경우 서두 없이 13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때 영문본 제1~3조항은 국한문본 제1~4조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한문본과 영문본은 체제나 세부 내용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으며, 마지막 위임통치 관련 구절만이 약간 다르다.

제1~3조항은 일본이 국제조약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은 사실,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언급했다. 일본은 병자수호조약(1876) · 천진조약(1885) · 시모노세키조약(1895) · 한일의정서(1904) 등을 통해 한국독립을 보장했고, 한국독립과 극동평화의 대의를 내세워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켰다. 미국도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통해 한국의 보전을 약속했다. 그러나 1905년 일본은 불법적 수단으로 을사늑약 체결을 강요했는데, 한국은 결코 이를 서명한 적이 없으며, 고종황제가 미국에 이를 호소함으로써 그 조약은 파기되었다.

제4~5조항은 한국민의 독립의지와 한국의 문화적 유구성을 논하였다. 한국은 일본통치에 결코 복종한 적이 없으며, 한국은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를 유지해온 당당한 독립국이다.

제6~9조항은 극동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과 일본의 침략정책을 방관할 경우 초래될 위험성을 논하였다. 한국문제는 극동문제의 관건이므로 한국을 발칸반도와 같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구미 열강의 아시아 점령지와는 경우가 달라 일본은 한국에 대해 하등의 권리가 없다. 일본의 한국병탄을 방치하면 일본이 아시아를 삼킬 것이며, 만약 일본이 경제적 · 상업적으로 아시아를 차지하게 되면 전세계의 이해관계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제10~12조항은 일본의 한국말살정책과 이에 대한 한국민의 대응을 논하고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요청하였다. 현재 일본은 무단정치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3 · 1운동으로 드러난 것처럼 한국민은 일제에 대항하여 강한 독립의지를 나타내고 있

다. 한국민은 고유의 민족감정을 지닌 민족으로서 일정 부분 자유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본과는 평화롭게 살 수 없으며, 일본이 감독국의 일원이 아니라는 조건 아래 일정기간 한국을 국제적 감독에 맡겨 달라.

이상에서 살펴본 이승만·정한경의 위임통치청원서와 김규식의 위임통치청원서에서 핵심 부분은 위임통치를 요청한 구절이다. 양자의 위임통치청원의 내용을 도표로 처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승만·정한경본과 김규식본의 위임통치청원 구절 비교〉

이승만·정한경본	김규식본
저희들은 자유를 사랑하는 1,500만 한국인의 이름으로 각하께서 여기에 동봉한 청원서를 평화회의에 제출하여 주시옵고, 또 **이 회의에 모인 연합국 열강이 장래에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하에 현재와 같은 일본의 통치로부터 한국을 해방시켜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아래에 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들의 자유 염원을 평화회의 석상에서 지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반도는 모든 나라에 이익을 제공할 중립적 통상지역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는 극동에 새로운 하나의 완충국을 탄생시킴으로써 동양에 있어서 어떤 특정 국가의 확장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한문 청원서) 列强 諸邦이 如 其吾韓國에 同意를 與하야 **永久中立을 得케 할지면** 我 韓人은 欣覩히 願함이니 單히 **日本이 其間에서 優越權을 行使함만 不願함이라.** (영문 청원서) 고유의 강한 민족적 감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이래 날이 갈수록 냉혹한 증오심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비록 일정 부분의 자유가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인들은 결단코 일본과 같은 이민족 지배하에서 평화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감독국(a supervisory group)의 일원이 아니라는 조건 아래, 스스로를 일정한 보호 기간 동안 한국을 국제적 감독(international supervision for a probationary period)에 맡길 것을 바랍니다.**

양자의 위임통치청원 대목을 비교해 보면, 전자가 국제연맹이 출범하는 민감한 시기에 국제법적 내지 국제정치적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독립에 필요한 면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가운데 위임통치를 요청하고 있는데 반해, 후자는 국제법이나 국제정세에 대한 면밀한 고려장치가 다소 부족한 단순한 형태의 위임통치를 구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모두 일본이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감독국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한국이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아래에서 영세중립국의 지위를 누리고, 일정 보호기간 이후에 위임통치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완전한 독립을 이룩하는 단계로 나간다고 하는 발전 과정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논리구조를 갖고 있다고 평할 수 있다.

2) 위임통치청원서에 담긴 단계적 · 점진적 독립 구상

이승만과 정한경은 자신들의 위임통치청원이 반대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자 여러 번 다음과 같이 응대했다. "위임통치청원은 제1차 대전 종전 후 세계여론이 한국문제에 대해 아무 관심도 나타내지 않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외교적 방책으로 시도해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52] "위임통치청원은 3 · 1운동 이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3 · 1운동과 같은 완전독립 추구운동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53]

그러나 이승만과 정한경은 3 · 1운동 발발 소식을 접한 지 1주일 후에도 위임통치청원을 계속했고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그 청원서를 언론에 배포한 사실이 있다.[54] 또한 김규식은 3 · 1운동이 발발한 지 한 달도 더 지난 4월 초순에 위임통치청원서를 만들어 5월 상순 이후에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했다.[55] 이런 사실들에 비추어 위임통치 청원운동이 일시적 방책이라거나 3 · 1운동 이전 활동에 불과한 것이라는 파리강화회의 한국대표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국제정세와 미국상황에 밝은 이승만 · 정한경 · 김규식 등이 비

---

52) 『독립신문』 1921년 2월 26일자 「대통령담」.

53) 『한국독립운동사 자료2』, 정한경→안창호(1921.6.13), 249쪽.

54) "300만 명의 독립단이 예수교도 · 천도교도와 함께 들고 일어났다"는 현순의 3 · 1운동 통보전보를, 정한경은 3월 9일 밤 안창호로부터, 이승만은 3월 10일 각기 서재필과 정한경으로부터 들었다. *Log Book of S. R.*, 1919년 3월 10일 ; *The Syngman Rhee Correspondence in English, 1900~1948*, Vol. 2, p. 213.

55) 김규식이 작성한 1919년 4월부의 문건들은 대부분 1919년 5월 상순~중순경에 발송되었다.

판받을 소지가 있는 위임통치청원을 3·1운동 발발 후에도 계속 제기하고, 심지어 정한경처럼 일본에게 한국에 대한 자치권이나 참정권을 허용하라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관해서 살펴보면, 첫째로, 이승만 등은 당시의 국제정세가 한국독립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주목했을 것이다. 일본은 파리강화회의 승전국으로서 자국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러시아 혁명세력을 견제하고자 국제연맹에 일본을 끌어들이려 애쓰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국제열강의 도움으로 독립을 찾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둘째로, 그들은 당분간 한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승만과 정한경이 참가한 1919년 4월의 제1차 한인대회에서 "한국 독립 후 적어도 10년 동안은 일반 국민의 교육 정도를 참작하여 그들의 참정권 행사에 제약을 가한다"는 결의안이 채택된 사실이 있다. 이로 미루어 그 시점에서 이승만 등은 한국민의 자력에 의한 독립회복과 자치능력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었다.[56] 이승만 등은 이런 이유들을 고려해 3·1운동 발발 후에도 독립운동의 일환으로서 위임통치청원을 계속했던 것이다.

이승만·정한경·김규식 등이 위임통치청원서를 작성·제출한 배경에는 한국상황과 시대배경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굳건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들 3인은 모두 개신교 신자로서 미국의 고등학문과 정치사상을 이수하고 온건한 방식의 독립노선을 지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위임통치청원서를 작성·제출한 사상적 배경과 동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제 그들의 사상적 배경과 동기를 잘 알 수 있는 이승만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개화기 이래 이승만은 민중계몽운동에 종사한 서구지향적 개혁운동가였다. 그는 미국식 민주주의, 기독교사상, 서양 근대문명 등을 한국사회에 이식하여 한국을 미국형 선진국가로 만들려는 근대적 계몽사

56) 고정휴, 「독립운동기 이승만의 외교노선과 제국주의」, 143~144쪽.

상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정치제도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일정 기간 동안 인민의 정치참여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정도로 엘리트의식이 강했다. 이런 배경에서 그는 한국민이 자력으로 독립을 달성하는 것은 당분간 힘들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약소국가에 가장 시혜적인 나라라고 알려진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국가독립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위임통치청원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둘째, 이승만은 "독립 능력을 갖춘 나라에 대해서만 독립을 승인해 준다"는 미국의 건국 이래 신국가 승인 원칙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실들을 그는 자신의 박사논문에서 여러 번 거론했다. 예컨대, 1837년 텍사스 독립 승인 때에 멕시코가 반발하자 미국정부는 "당사자가 실제로 독립을 선언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였다. 이에 1840년 영국과 프랑스도 미국의 독립인정 예에 따라 텍사스 독립을 승인했다.[57] 또 헝가리 독립을 승인하라는 요구가 거세던 1849년에 미국은 독립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헝가리의 독립을 승인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58] 또 남미 공화국들의 독립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신정부에 대한 승인 여부는 첫째 독립국가로서 존속할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 둘째 해당 정부가 외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렸다"고 하였다.[59]

셋째, 이승만은 미국이 중국에서 문호개방정책을 통해 유럽 열강을 견제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일본의 영향력을 저지해주기를 바랐다. 이승만은 1905년 헤이(John Hay) 미국무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문호개방정책을 언급하며 한국에서도 중국에서와 같은 정책을 택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60] 그런데 헤이의 문호개방정책은 중국에서 평등한 통상권과 중국의 영토보존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유럽 열강에 의한 중국 분할의 위기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극동에서 세력경쟁에 뒤진 자국의 입

57) 이승만 저, 정인섭 역, 『이승만의 전시중립론』, 나남출판, 2000, 101~102쪽.

58) 『이승만의 전시중립론』, 103쪽.

59) 『이승만의 전시중립론』, 100~101쪽.

60) Robert T. Oliver, *Syngman Rhee : The Man Behind the Myth*, New York: Dodd Mead and Company, 1955, pp. 82~83.

장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승만은 한반도에 대한 열강의 침투와 일본 영향력 강화로 한국의 국권 보존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국제법에 의거한 균세외교와 '중립적 교역'에 의한 자유통상의 확대를 통해 독립을 유지하려고 하는 구상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61]

넷째, 1910년대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발간한 『태평양잡지』를 통해 자신의 외교독립론의 핵심논리를 전파하고 있었다. 『태평양잡지』에 실린 논설들에서 그는 아일랜드의 자치운동, 미국의 필리핀 통치, 인도의 평화적 독립운동, 발칸반도 소국들의 독립운동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를 통해 아일랜드 · 필리핀 · 인도 · 발칸 소국들이 열강으로부터 식민통치를 받는 기간에 자치운동을 통해 힘을 길러 독립을 획득했음을 주목하고, 자신이 목도한 역사적 경험을 한국문제에 그대로 적용하려 하였다. 특히 필리핀에 자치정부를 세워주고 영세중립국으로 만들자는 미국 존스 하원의원의 주장은 한국문제에 그대로 적용할 만한 것이라고 보았다.[62]

이승만이 피식민국가의 자치문제나 영세중립화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 것은 즉각적 독립 가능성이 희박한 한국의 현실상황에서 내정의 자치권을 일제로부터 환수한 다음, 내부적으로 점차 독립을 위한 힘을 비축해나가는 한편, 외부적으로 강대국들로부터 영세중립국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을 최종적인 독립운동 방안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승만은 비판자들로부터 영세중립론을 구상했다거나 영국 · 미국 · 터어키 등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했다는 비난을 사게 되었다.[63] 하여튼 대규모 독립전쟁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국의 현실적 여건과 미일간 우호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1910년대 국제정세를 고려한 이승만의 자치운동과 영세중립화운동은 현실적 차선책으로서의 위임통치청원을 제기하게 되는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64]

---

61)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125~126쪽 ; 홍용표, 「이승만의 대외인식과 임시정부 초기 독립외교」, 403쪽.

62) 『태평양잡지』 1914년 4월호, 「필립빈독립」, 66~67쪽.

63) 정두옥, 「재미한족독립운동실기」, 『한국학연구』 3,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991, 65~66쪽.

다섯째, 이승만은 위임통치청원이 전시중립국의 지위에 준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했을 것이다. 국제연맹 규약 제22조에 따르면, 국제연맹에 의해 위임통치를 받는 지역은 일체의 군사시설, 즉, 요새나 육군 및 해군기지를 세울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거주민의 징집도 금지되어 있었으며, 대신 그 지역에 대해 문호개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다.[65] 이를 보면 윌슨대통령이 구상한 위임통치는 전시중립론과 같이 통상의 자유를 원리로 하는 제도였다. 국제법 학계가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제도를 부분적으로 중립화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제도로 간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66] 미국과 유럽간의 전시중립정책과 중립통상 문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국제법 대가 이승만이 이 부분을 간과했을 리가 만무하다. 이승만은 한반도를 문호개방 지역으로 만들어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구상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세인식과 현실인식의 바탕 위에서 이승만 · 정한경 · 김규식 등은 1910년대 말경의 국제정세와 국내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위임통치청원을 통해 단계적 · 점진적인 독립방안을 강구했다. 정한경은 1919년 3월 14일자 『뉴욕 상업보』 기자와 가진 회견에서 "현금 한인들이 원하는 것은 국제연맹회에서 한국을 관할하되 민주정치를 쓰는 미국이 한국정치를 고문하여 차츰 한국독립의 기초를 굳건히 하고자 함이라"고 하였다.[67] 이것은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위원회가 미국을 한국의 위임통치국으로 지정하면, 미국의 위임통치 하에서 한국은 정치와 경제를 착실히 발전시켜 독립의 기초를 닦고, 다음 단계에서 완전독립을 달성한다고 하는 현실적인 독립방안이었다. 또한 한국이 영세중립국이 된다는 전제

64) 이승만의 『태평양잡지』 발행과 거기에 담긴 독립구상에 대해서는, 오영섭, 「하와이에서 이승만의 언론활동」, 오영섭 · 이덕희 외, 『이승만과 하와이 한인사회』, 연세대 출판부, 2012, 제4장 제1절 참조.

65) 立作太郎, 『國際聯盟 規約』, 國際聯盟會, 1932, 332~338쪽.

66)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Neutrality Trading," Amsterdam : North Holland, 1981, pp. 546~550 ; 최정수, 「이승만의 『미국의 영향 하에 성립된 중립론』과 외교독립론」,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현실인식』, 연세대 출판부, 2011, 132쪽.

67) 『신한민보』 1919년 3월 22일자 「한국대표자의 청원을 거절」.

하에 일정 기간 감독국의 통치를 인정한 김규식의 위임통치청원서도 미래 어느 시점에 독립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승만 · 정한경의 위임통치논리와 동일한 논리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승만 · 정한경 · 김규식은 즉각적인 완전독립이라고 하는 최선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현실적 차선책'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민족자결주의가 거론되고 국제연맹이 창설되는 국제정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을 일제의 지배로부터 구하기 위해 윌슨대통령과 파리강화회의에 위임통치를 청원하게 되었다. 이때 그들은 한국에 대한 위임통치국으로서 미국을 고려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한경은 "미국이 한국정치를 고문하여 차츰 한국독립의 기초를 굳건히 하자"고 하였다. 1919년 4월과 1921년 2월에 이승만은 자신이 위임통치를 청원할 때에 "미국의 위임통치를 받고자 했다"고 토로했다.[68] 그리고 윌슨대통령에게 영문 청원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아 김규식은 윌슨대통령에게 기대를 걸고 미국을 위임통치국으로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승만 등이 미국을 한국의 위임통치국으로 상정한 것은 개화기 이래 한국인들이 품고 있던 호의적 대미인식,[69] 즉, 미국은 물산이 풍부하고, 인의도덕을 중시하고, 영토욕이 없고, 기독교를 숭상하는 세계지도국이라는 친미적 대미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위임통치하에서 한국의 발전과 독립을 단계적 · 점진적으로 달성하려는 독립구상이 가장 분명하고도 정치하게 드러난 것은 이승만 · 정한경의 위임통치청원 구절이다. 이승만 · 정한경의 위임통치청원서의 핵심 구절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저희들은 자유를 사랑하는 1,500만 한국인의 이름으로 각하께서 여기에 동봉한 청원서를 평화회의에 제출하여 주시옵고, 또 이 회의에 모인

---

68) 『이승만 동문 서한집』 상, 이승만→현순(1919.4.27), 170쪽 ; 『독립신문』 1921년 2월 26일자 「대통령담」.

69) 유영익, 「개화기의 대미인식」, 『한국인의 대미인식』, 민음사, 1994, 55~130쪽.

> 연합국 열강이 장래에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 하에(in the future with the definite guarantee of complete independence in the future) 현재와 같은 일본의 통치로부터 한국을 해방시켜 국제연맹의 위임통치(under the mandatory of the League of Nations) 아래에 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들의 자유 염원을 평화회의 석상에서 지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면 한반도는 모든 나라에 이익을 제공할 중립적 통상지역(a zone of neutral commerce)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는 극동에 하나의 완충국(a butter state)을 탄생시킴으로써 동양에 있어서 어떤 특정 국가의 확장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70]

상기 위임통치청원 구절의 주지는 "장래 한국의 완전 독립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한국을 일본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에 두어달라는 것이다. 이때 일본 통치 하에서 국제연맹의 감독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 통치하에서 국제연맹의 감독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한국은 극동에서 새로운 완충국으로 등장하여 세계 각국의 자유통상에 크게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며, 동양에 있어서 특정 국가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저지하는 평화선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이 이승만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이승만·정한경의 위임통치청원서에서 위임통치를 요청한 구절만을 떼내어 이승만 등을 비판하곤 하였다. 그러나 이 청원서에 실린 이승만 등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미국의 위임통치 하에서 일정기간 한반도에 중립화를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미국이 한반도의 위임통치를 맡아 행함으로써 한반도가 중립적 상업지대나 완충국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때 '중립적 상업지대'란 용어는 이승만이 프린스턴대학에서 국제법 분야로 받은 박사논문("미국의 영향 하에 성립된 전시중립론")의 핵심개념인 '중립교역'·'중립무역'·'중립교역의 자유'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개념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세력균형('均勢')을 이

70) 〈부록 1〉의 이승만·정한경의 1919년 2월 25일자 위임통치청원서 참조.

루자는 것에 다름 아니며, 동시에 한반도 중립화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위임통치청원서에 담긴 이승만의 중립화론은 1880년대 전반 유길준－김옥균부터 시작하여 1890년대를 거쳐 1900년대 초반까지 고종황제를 비롯한 대한제국 집권층이 국권수호방략으로 주목한 한국중립화정책의 전통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승만은 조선－대한제국의 중립화방안을 충실히 계승하여 가장 완결된 형태로 발전시킨 다음, 이를 1910년대 후반 국제적 상황전개에 맞추어 위임통치청원서에 담아냈다는 점에서 한국외교사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한제국기에 옥중에서 집필한 『독립정신』에서 이승만은 대한제국 집권층의 한반도 중립화운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항구적 태평을 누리는 영세중립국이 속국이나 보호국보다는 좋지만, 그러나 자유 활동하는 힘이 없어서 남과 부강을 겨루지는 못한다"는 생각에서 영세중립국을 반대했다. 또 그는 자주국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중립화를 통해 정권유지만을 도모하는 집권층을 질타하기도 하였다.[71] 이를 보면 이승만에게 한반도 중립화는 경제적 부강을 가져오지 못하는 절름발이 영세화에 불과하며, 따라서 그것은 결국 완전한 자주독립국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서의 의미만을 지니고 있을 뿐이었다.

『독립정신』 집필 당시에 이승만은 만국공법적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체하면서 세계 각국과 자유통상을 통해 국가를 부요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72] 이처럼 자유통상을 통한 국부의 확대는 완전독립의 중단단계로서 한국중립화문제를 고려할 때에 영세중립국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주요 논리로 채용되었다. 이를테면 이승만은 한국이 당분간 미국의 위임통치가 작동하는 중립적인 완충지대와 통상지대로 남아 세계 각국과 자유통상을 통해 국부를 증진시켜 독립의 기초를 닦자고 함으로써 자신이 지적한 영세중립국의 약점을 보완하려 했던 것이다.

이승만 · 정한경 · 김규식의 위임통치청원론은 국제여건이 한국독립에

71) 이승만, 『독립정신』, 정동출판사, 1993, 47~48쪽.

72) 이승만, 『독립정신』, 248~251쪽.

불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궁여지책이 아니라 미국의 전시중립론과 국제법에 대한 정통한 지식을 바탕에 두고 적극적으로 현실적 차선책을 강구하는 가운데 정립한 외교구국방안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윌슨대통령이 위임통치제도를 만들 때에 그 근본의도는 통상의 자유를 원리로 하는 세계적인 통상망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때 최대의 장애물 중의 하나는 바로 열강간의 끊임없는 영토쟁탈전을 야기시키고 있는 식민지문제였다. 바로 여기서 윌슨대통령은 식민지 해방을 위한 논리, 즉 민족자결주의(self-determinaion)를 제창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윌슨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제창을 가장 적절히 반영한 것이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서였다.[73]

요컨대 이승만 · 정한경 · 김규식 등은 한국이 비교적 은혜로운 기독교 민주주의국가인 미국의 위임통치 하에서 일시적 내지 잠정적 중립화를 달성하고, 중립국 체제의 자치적인 정치환경에서 내치의 자유를 누리며 정치적 권리와 미국식 민주주의를 학습 · 신장시키고, 만국과의 자유통상을 통해 국부를 증대시켜 정치와 경제의 실력을 굳건히 다지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서 미일전쟁의 발발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완전독립을 달성한다고 하는 원대하면서도 점진적 · 단계적인 독립구상을 위임통치청원서에 그대로 담아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서에 나타난 외교독립구상은 단순히 미국일변도의 사대외교론이나 외교제일주의라기보다는 실력양성론적인 외교독립론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겠다.[74]

---

73) 최정수, 「이승만의 『미국의 영향 하에 성립된 중립론』과 외교독립론」, 133~134쪽.

74) 이승만은 "한국의 독립운동은 한국인의 피가 아니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이것이 독립정신이다"라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이승만 동문 서한집』 상, 이승만→백순(1922.4.28), 40~41쪽. 이를 보면 이승만은 위임통치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의 자치상태 내지 중립화 상태에서 최대한 실력을 길러 미일전쟁 발발과 같은 국제정세 변동을 적극 이용하여 독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보았던 셈이다.

4. 위임통치청원을 둘러싼 독립운동세력 간의 갈등양상

이승만·정한경의 위임통치청원은 1910년대 말의 국제정세와 한국실정을 감안한 차선적 독립방안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 만큼 거기에는 조국 독립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닌 이승만 등의 애국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런데 그들의 청원서에서 위임통치를 요청한 구절의 바로 윗부분 독립보장("장래 한국에 대한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구절과 그 아랫부분 중립화구상('중립적 통상지대와 완충국') 구절을 제쳐두고 단순히 국제연맹에 한국의 위임통치를 요청한 구절만을 떼어 강조하게 되면, 이승만 등은 그야말로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같은 역적이 되고 만다. 이로 인해 그 작성 동기나 내용의 애국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위임통치 청원문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비판대상이나 논란거리로 부상할 위험을 안고 있었다.

이승만이 임정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 벌어진 위임통치 청원논쟁은 위임통치청원론의 성격과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논쟁이라기보다는 적대적 경쟁세력을 타도하기 위한 사상투쟁과 패권경쟁의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위임통치청원 반대자들은 임정이 내부파쟁과 노선차이로 인해 최고 독립운동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상실한 점을 비판했고, 임시대통령 이승만이 상해에 부임하지 않고 미국에 계속 머물며 대통령 호칭 논란과 공채금－애국금 논쟁 등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둘러싸고 임정과 대립을 거듭하며 임정을 난맥상을 방치한 것을 문제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통치 청원논쟁은 위임통치청원 반대운동에서 그치지 않고 반임정·반이승만 운동을 지향하는 노선투쟁과 정권투쟁 양상으로 번져나가기 마련이었다.

3·1운동 이후 이승만 등의 위임통치청원을 가장 먼저 비판한 것은 박용만세력이며, 꺼져가던 위임통치 청원논쟁에 다시 불을 지펴 1921년 봄~여름경 독립운동계의 최대 이슈로 만든 것도 박용만세력이다. 물론

상해임정내 이동휘세력과 안창호세력, 박용만세력의 반이승만·반임정 구호에 동조한 노령·만주·북경의 무장투쟁－의열투쟁 계열의 독립운동가들, 김규식·현순 등 이승만과 불화한 인사들도 위임통치청원을 비판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위임통치청원 비판운동의 주역은 박용만세력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위임통치 청원논쟁은 하와이에서 이승만과 노선 갈등과 패권경쟁을 벌인 박용만(1881~1928)과 그 지지자들이 이승만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이다.[75]

박용만세력이 주도한 위임통치청원 비판운동은 표면적으로 이승만과 그 주변 인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그것은 반대세력을 타도하고 말겠다는 망국적인 당파논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1910년대 전반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극명히 갈라진 노선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당시 이승만은 학교·교회·잡지사를 운영하며 외교독립론과 실력양성론 등 온건노선을 추구했던 반면, 박용만은 독립전쟁을 수행할 대조선국민군단을 창설하여 하와이 동포들에게 무장군사훈련을 시키며 급진노선을 강조했다. 이들의 사상투쟁은 1919년 2월 이승만이 자신의 외교독립론의 정수가 담긴 위임통치론을 제창하면서부터 다시 점화되었다. 그리하여 3·1운동 전후에 이승만이 외교독립론의 실현을 위해 미국 본토로, 박용만이 공산주의자들과 무장투쟁론자들이 활동하는 원동으로 활동무대를 옮기면서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했다.[76]

---

75) 박용만은 정한경과 악연이 있었다. 정한경이 협성회에 보내 상해 한인사회에 널리 알리게 했던 사실에 의하면, 1904년 박용만은 정한경의 부친과 李嘉信의 자금 2만원을 절취하여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에 정한경은 이희신의 아들 李觀泳과 도미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박용만을 붙잡았다. 그러나 박용만이 애걸하며 용서를 구하자 돈만 돌려받은 후에 풀어주었다고 한다. 정한경, 「협성회 간사부원 첨좌하」(1921.8.15), 『우남이승만문서 : 동문편』 8, 353쪽.

76) 이승만은 1919년 1월 6일, 박용만은 1919년 5월 17일 하와이를 떠났다.

1) 상해임정 출범 초기의 갈등 양상

이승만 · 정한경의 위임통치청원서 내용이 미국 본토 신문들에 처음 소개된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19년 3월 17일이다. 이어 3월 27일 만국연합통신사 전보를 통해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 사실이 구미 신문에까지 보도되었다.[77] 하와이에서는 본토에서 날아온 전보를 바탕으로 3월 17일자 영자신문 *The Pacific Commercial Advertiser*에 "워싱턴 3월 16일 전보(연합통신사). 대한인국민회에서 윌슨대통령에게 요구하기를 한국독립의 장래를 위하여 파리강화회의에 주선하여 한국이 장래에 독립정부를 건설하기에 적당함을 국제연맹에서 인정하여 줄 때까지 미국의 지도를 받는 위임통치국이 되기를 바란다" 내용의 신문기사가 나왔다.[78]

이승만 · 정한경의 위임통치청원 사실이 하와이 신문을 통해 알려지자 1919년 3월 3일에 발족한 박용만 측근세력인 하와이 대조선독립단은 4월 1일 이전에 2차례나 국민회 중앙총회장 안창호에게 전보를 보내 '의혹스런 어투로' 위임통치문제를 질문했다. 위임통치청원서의 발송을 승인했던 안창호는 위로의 답전을 보낸 다음, 이승만에게 편지를 보내 대조선독립단의 오해를 풀어주라고 넌지시 말했다.[79] 이때부터 하와이의 박용만세력은 한국독립운동가들이 몰려있는 遠東 각지에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 사실을 전보로 알리며 이승만을 비판하기에 골몰했다.

1919년 4월 10일 밤 상해에서 임정 수립을 위한 독립운동가 회의가 열렸다. 이때 국호를 대한민국, 관제를 총리제로 택한 후 국무총리 인선에 들어갔다. 한성임시정부 국무총리인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뽑자는 신석우의 동의가 있은 후, 신채호가 "이승만은 위임통치와 자치문제를 제창하던 자이므로 국무총리로 신임키 불능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때 그는 "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더 큰 역적이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

77) 『우남이승만문서 : 동문편』 8, 「성토문」(1921.5), 295쪽.
78) 현순, 「華盛頓外交實記」, 제5장 참조.
79) 『이승만 동문 서한집』 하, 안창호→이승만(1919.4.1), 5쪽.

지만, 이승만은 아직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은 놈이다"며 이승만을 비난했다고 한다.[80] 이어 국무총리를 별도로 뽑자는 신채호의 발언과 후보자 3인을 추천하여 투표하자는 조소앙의 동의에 따라 추천된 이승만·안창호·이동녕 3인을 두고 투표한 결과 이승만이 당선되었다.[81] 이를 보면 1910년대 초반 블라디보스톡의 대동공보사 주필로 활약할 때부터 하와이의 박용만세력과 기맥을 통하며 이승만의 자치운동을 비판하던 신채호의 강력한 반대가 있기는 했지만, 아직 상해에서는 위임통치 청원 문제가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큰 논란거리로 부각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승만이 임정 국무총리에 선임된 후에 상해의 현순이 이승만에게 여러 번 위임통치문제를 전보로 물었다. 이에 이승만은 1919년 4~5월경 현순에게 10여 차례의 답전을 보내 해명에 나섰으나 그 전보들은 현순에게 전해지지 못했다. 그러자 현순은 4월 26일자 전보에서 "귀하가 위임통치를 청원했다는 소문이 돌기 때문에 귀하의 목적이 위임통치인지 독립인지가 우리 사업에 큰 걸림돌이다"며 위임통치청원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요구했다.[82] 또 이때쯤 현순은 별도로 샌프란시스코의 국민회 중앙총회에 누차 전보를 보내 '위임통치사건'을 질문했다. 이로써 위임통치 청원 문제는 임정 안팎에서 점차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었다. 그러자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던 김규식은 "맨데토리문제로 말할 것이 아니다"며 위임통치청원을 적극 옹호하는 전보를 상해로 보냈는데, 현순에 의하면 이 전보는 임정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83]

박용만세력이 이승만에 대해 비판수위를 점차 높여가는 동안, 상해 임정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이승만과 함께 미주 한인사회를 양분한 안창호

---

80) 여운홍, 『몽양 여운형』, 청하각, 1967, 38~39쪽 ; 이기형, 『몽양 여운형』, 실천문학사, 1984, 40쪽.

81)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2, 국사편찬위원회, 2005, 17쪽.

82) 『이승만 동문 서한집』 상, 이승만→현순(1919.4.27), 169·175쪽.

83) 현순, 「華盛頓外交實記」, 제5장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시스템, 독립운동가자료, 위임통치항목, [현순의 상해 임시정부 참여, 1919~1923] 참조.

는 위임통치 청원문제에 대해 직접 개입하지 않으려 하였다. 그는 정한경이 국민회 중앙총회에 보낸 위임통치청원서를 검토한 후 발송을 허가한 바가 있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직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위임통치 청원논란에 대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임정이 조직될 당시에 안창호는 "위임통치 청원논란은 이승만에게 사감 있는 자의 소행이다"며 박용만세력을 지목했다.[84] 또한 그는 1919년 12월 민단 강연회 석상에서 "위임통치니 자치니 하는 과거문제는 다 잊어버리고 미래로 나가자"고 역설하기도 하였다.[85] 이후 "위임통치는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의 일이요, 또한 한국독립운동에 큰 방해가 없는 문제다"라며 방관자적 태도를 보였다.[86] 이로 인해 이동휘파로부터 "(안창호는) 미주에서 이승만·정한경으로 더불어 미국의 보호를 청할 때에 그 청구서에 서명을 하고 나온 付美派요 독립사상이 없는 자이다"라는 비판을 듣기도 하였다.[87] 당시 일제 정보기록은 "안창호는 미국의 위임통치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이다"는 평을 내리고 있었다.[88] '안창호의 기관지'라는 세평을 받은 미주 『신한민보』나 상해 『독립신문』이 위임통치 청원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위임통치 청원논란이 일시 수면 아래로 잠복하자 박용만세력은 다시 이승만을 공격하고 나섰다. 1919년 8월 29일 국치일에 박용만 후원단체인 하와이 대조선독립단[89] 단원들과 대조선독립단의 자매기관인 태평양

---

84) 신채호 등 54인, 「성토문」, 『우남이승만문서 : 동문편』 8, 264쪽.

85) 『독립신문』 1919년 12월 27일 「勿彷徨」.

86) 현순, 「셩명서」, 『우남이승만문서 : 동문편』 8, 336쪽.

87) 안창호, 「일기」, 1920년 1월 21일, 『도산안창호전집』 4, 도산안창호전집편찬위원회, 2000, 841쪽.

88) 『한국민족운동사료 : 중국편』, 「상해在住 한인독립운동자의 근황」(1921.10.14), 국회도서관, 1976, 361쪽.

89) 대조선독립단은 박용만과 그 지지자들이 독립운동 후원을 위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조직한 단체로서 박용만이 연해주-북경 일대에서 활동할 때에 재정지원을 맡았다. 김원용, 『재미한인50년사』, 혜안, 2004, 145~148쪽.

시사사 사장 조용하(1882~1937)가 공동으로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을 강하게 비난하는 성토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이승만은 2월에는 국민회를 대신하여 한국이 열강의 보호를 받도록 上國에 애걸하더니 3월에는 국무경으로서 절대독립을 세계에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보호를 요청한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이며 한 달 만에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대통령의 체모나 자질이 없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아울러 정한경이 1919년 5월호 『아시아』 잡지에 자치론을 거론한 것까지 싸잡아 비판하였다.[90]

하와이에서 임정에 전해진 박용만세력의 청원서는 임정내 차장급 인사들의 반이승만 기류를 확산시키는 한편, 안창호 · 이동휘 등 정치적 경쟁자들의 반이승만 활동에 기본 소재로 활용되었다. 나아가 원동 각지에 산재한 무장투쟁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박용만세력의 활동에 자극받아 위임통치청원 반대세력으로 뭉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이승만 · 박용만 · 안창호 등의 독립활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혁신공보』는 창간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여기에는 박용만세력의 위임통치청원 성토활동에 대해 원동 각지의 박용만 지지세력들, 즉 무장투쟁론자들이 차츰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정황이 잘 나타나 있다.

> 李承晩 박사는 미국 國民會 대표로 미국정부에 우리나라를 미국 委任統治 아래에 두어달라고 애걸 청원한 자이니 때는 삼일운동이 일어난 해이라.…그 해에 이 사실을 자세히 파악한 이가 없었고 오직 議政院 석상에서 申采浩 한 사람이 直言과 公評으로 李博士의 元首奉戴說을 강력히 반대했을 뿐이라. 그러나 당시 인심은 이를 알지 못하고 드디어 (대한)民國 제1대 元首로 봉대함에 이르렀다.…이에 太平洋時事報 기자가 성토문을 만들고 布哇獨立團이 성토를 개시하매, 상해, 북경, 서북간도, 노령 동지들이 점차 깨달아서 일제히 분기하여 분연히 성토하였다.[91]

---

90) 조용하 등, 「誕告文」, 『우남이승만문서 : 동문편』 8, 256~259쪽.

91) 『革新公報』 창간호, 「臨時政府의 過去, 現在 及國 將來」, 1922.8 ;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7』, 국사편찬위원회, 2001, 108쪽.

1919년 11월 3일 임정의 국무총리로 부임한 이동휘가 기세를 잡기 위해 위임통치 청원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동휘는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이승만을 '썩은대가리'라고 비난하고,[92] 환영회 석상에서 "자치운동이나 위임통치를 원하는 외교가는 원치 않는다"고 말함으로써[93] 임정이 '상해정부'·'내지정부'·'위임통치' 등의 문제로 소란해졌다.[94] 그러나 당시 임정 요인들 중에 이동휘·안창호·박용만세력 외에는 위임통치 청원논란을 크게 믿지 않는 기색이었다.[95] 그러자 신채호·박은식·김창숙 등이 이승만에게 위임통치 청원논란에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라는 서한을 보냈으나 이승만은 이에 일체 응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동휘는 이동녕·이시영·안창호·김구 등과 함께 대통령을 성토하면 임시정부가 분리될 위험이 있다며 신채호 등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다. 이는 이동휘가 당분간은 이승만 대통령 중심의 임정 통치구조를 변개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었다.[96]

1920년에 들어 인심 변화와 일제 탄압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봉착한 임정에서 청년차장들이 쇄신운동을 주도해나갔다.[97] 안창호의 영향력 하에 있던 청년차장들은 1920년 5월 14일 모임을 갖고 임정의 난국타개를 위한 시국수습안을 모색했다. 그들은 각부 차장과 국무원 비서장이 연명하여 대통령불신임안을 제출한 다음 총사직하기로 결정하고 4개항의 불신임 사유에 합의했다. 이중 제1항에는 "신성한 독립사업에 불신성한 인물이 맨 윗자리에 있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하여 위임통치 청원운동을 벌인 이승만을 퇴진시키고 신내각을 조직할 것을 요구했다.[98] 그러나 이 시점에서 임정의 해체보다는 유지를 바라고 있던 안창호가 청년차장들

92) 주요한, 「전기편」, 『안도산전서』 상, 범양사, 1990, 116쪽.
93) 『이승만 동문 서한집』 상, 이승만→현순(1919.4.27), 170~171쪽.
94) 『이승만 동문 서한집』 하, 안현경→이승만(1920.1.30), 31쪽.
95) 『이승만 동문 서한집』 하, 안현경→이승만(1920.1.1), 19쪽.
96) 김창숙, 「잡기」, 『(국역)심산유고』, 국역심산유고간행위원회, 1979, 731~732쪽.
97) 윤대원, 『상해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서울대 출판부, 2006, 103~109쪽.
98) 『안도산전서』 중, 도산기념사업회, 1990, 1920년 5월 20일.

을 설득해 나가면서 임정쇄신운동은 점차 가라앉았다.[99] 이어 수차 이승만과 함께 일할 수 없다며 임정 쇄신을 주장하던 이동휘가 6월 18일 이승만 불신임 사유서와 국무총리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6월 22일 북중국 위해위로 떠났다.[100] 이로써 임정 내에서 위임통치 청원문제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2) 이승만의 상해 체류 시기의 갈등 양상

1920년 12월 28일 임정 부임 환영식상에서 이승만은 임정의 현안이자 참석자들이 궁금해 하는 독립노선과 재정문제에 관한 중요 발언을 하였다. 하나는 러시아 과격파의 원조를 빌려 한국독립운동을 추진하려는 이가 임정에 있음을 비판하고 "오로지 미국의 성의 있는 원조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01] 이는 1919년 11월 3일 취임 이래 임정의 정책방향을 독립전쟁론으로 몰아가고 있는[102] 무장투쟁론자 이동휘 국무총리, 그의 독립전쟁론에 동조하며 임정의 차장라인과 임시의정원을 통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준비론자 안창호 노동국총판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었다.[103] 다른 하나는 "내가 상해에 온 것은 많은 금전이나 대정략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상해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미동포들의 인사말을 전하러 왔다"는 것이었다.[104] 이러한 발언들은 임정의

---

99) 안창호, 「일기」, 1920년 5월 24~27일, 922~924쪽.

100) 안창호, 「일기」, 1920년 6월 18일, 940쪽.

101) 『한국민족운동사료 : 중국편』, 「독립신문 繼刊件」(1921.1.6), 214쪽.

102) 1920년 12월 1일 이동휘는 간도동포에게 보내는 포고문에서 "오늘 독립운동의 근본방침은 오직 혈전에 있다"며 독립전쟁론을 고취하고 있었다. 『독립신문』 1921년 1월 15일 「간도동포에게」.

103) 안창호는 1920년 1월 신년축하회 연설에서 한국민이 실행할 6대사로서 ① 군사, ② 외교, ③ 교육, ④ 사법, ⑤ 재무, ⑥ 통일을 들었고, 1920년 11월 27일 상해 민단사무소 연설에서 "적과의 전쟁을 외교와 동등하게 여기는 자가 있으나 요행을 바라는 외교를 도저히 나의 피와 땀으로 싸울 전쟁과 동일하게 여길 논할 수는 없다"며 독립전쟁론을 지지했다. 『독립신문』 1910년 1월 8일 「국민의 실행 6대사」 ; 1920년 12월 25일 「전진방침에 대하여」.

혼란과 침체를 일거에 해소할 대정략과 거액의 자금[105]을 대통령으로부터 기대했던 상해인사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었다. 나아가 신년벽두부터 임정 내에서 치열한 노선투쟁과 패권쟁탈전을 예고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1921년 1월부터 이승만이 상해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침체에 빠진 임정의 기능이 일단 정상화되고 독립운동이 황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게 되었다. 당시 이승만의 해결을 기다리는 과제는 4가지였다.[106] 첫째, 대통령제의 유지인가, 의원제의 채택인가 하는 제도변경의 문제, 둘째, 국내외 각지 독립운동단체의 분열을 극복하고 대동단결을 이루어야 하는 문제, 셋째, 반임정운동을 벌이고 있던 중국 내 단체에 대한 대응책 내지 완화책 강구 문제, 넷째, 임정의 재정곤란 해소책 문제 등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임정이 지닌 태생적·구조적 한계로 인해서 애초부터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었다.[107]

1921년 1월 5일 대통령과 각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가 열렸다. 각원들의 시정보고를 거쳐 이승만이 국제정세와 구미에서의 활동상황 등을 설명했다. 이어 국무총리 이동휘가 "세계대전 이후 민족자결주의가 고창되던 때에 나온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과 정한경의 자치론은 외교상 실패이며, 한민족의 독립정신을 현혹시킨 행동이다. 이로 인해 사회의 비난이 정부로 밀려들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자"며 이승만의 외교독립노선을 공격하고 나섰다.[108] 당시 이동휘가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

---

104) 『독립신문』 1921년 1월 1일 「대통령환영」.

105) 이승만에 의하면, 당시 임정 요인들은 이승만이 임정의 1년 예산에 해당하는 3~4만불을 가지고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The Syngman Rhee Correspondence in English*, Vol.1, Syngman Rhee→Philip Jaisohn(1921.1.18).

106) 『한국민족운동사료 : 중국편』, 「재상해 한국독립운동자의 행동」(1921.3.3), 325쪽.

107) 당시 임정 요인들은 문치파와 무단파, 출신지역에 따라 평안도·함경도파와 기호파, 대통령제 통치구조의 변개문제를 둘러싸고 현상유지파와 개조파, 정치사상 면에서 민주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직위와 나이에 따라 각료급 노장파와 차장급 소장파 등으로 갈려 대립했다. 『한국민족운동사료 : 중국편』, 「상해在住 한인독립운동자의 근황」(1921.10.14), 350~351쪽.

108) 김원용, 『재미한인50년사』, 351쪽.

원문제를 공격하고 나선 것은 독립전쟁노선과 외교독립노선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동휘의 공격에 대해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이승만은 적극 대응했다. 그는 재작년의 위임통치청원은 당시 정세를 고려하여 한국문제를 선전하자는 것으로서 독립을 부인하려는 것은 결코 아닐 뿐 아니라 이미 지나간 일이고, 따라서 지금 국제정세에 현혹되는 일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각원들은 위임통치청원의 동기가 고의로 독립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며 국제정세에 현혹됨이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동포들의 의혹을 풀어주자고 의결했다. 그러나 이승만이 성명서 발포를 거부함으로써 국무회의가 결렬되었다.[109] 당시 내각 내 위임통치청원 반대자들은 이승만을 축출하고 안창호로 하여금 내각을 조직케 하려 했으나 안창호가 자신도 '위임통치 연루자'이니 축출해 달라 말함에 따라 회의가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고 한다.[110]

이동휘가 "위임통치청원은 외교상 실패이며 그에 대한 사회의 비난이 밀려들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한 것은 이승만에게 위임통치청원논란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한 셈이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자신의 신념인 외교독립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임정의 주도권을 공산주의세력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직에서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111] 1월 24일 이동휘는 이승만과 이동녕·이시영·신규식 등 기호파와 안창호의 반대로 임정쇄신안이 채택되지 않자 임정을 탈퇴하였다.[112] 이동휘의 임정 이탈은 이제 상해 내외에서 반임정·반이승만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1921년 2월에 임정의 군무총장 노백린과 학무총장 김규식이 위임통치

109) 김원용, 『재미한인50년사』, 351~352쪽.

110) 『自由報』 제13호(1921.5.22), 「수라쟝인 상해졍국」;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7』, 68~69쪽. 이 회의에서 김규식, 노백린, 남형우, 이동녕은 이승만의 축출을 주장한 반면, 신규식과 신익희는 이승만을 적극 지지했다고 한다.

111) 반병률, 『성재 이동휘 일대기』, 범우사, 1998, 278~279쪽.

112) 『독립신문』 1921년 1월 27일자 「국무총리 사직설」.

청원문제를 거론하며 이승만의 대통령직 사임을 공식 요구했다. 양인은 미국 본토를 떠나 1920년 8월부터 5개월여 동안 하와이에서 함께 머물렀다. 이때 박용만의 측근인 태평양시사사 사장 조용하가 노백린에게 접근하여 이승만의 위임통치문제를 거론하며 이승만을 대통령직에서 탄핵하자고 권했다.[113] 이미 노백린은 1918년 하와이 체류 때에 태평양시사사의 주필을 지내며 박용만세력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은 터였다.[114] 이로 인해 이승만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박용만세력의 무장투쟁론에 더욱 공감한 노백린은 위임통치 반대입장으로 돌아섰다.

1921년 2월 24일 오전 이승만을 방문한 노백린은 이동휘가 국무총리를 사임한 이후에 안병찬이 탄고문이나 성토문을 작성하여 대통령을 탄핵하려 하는 것을 일단 저지했다고 하였다. 이어 그는 이승만에게 위임통치문제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고 정부 고문관으로 물러나 앉을 것과 이동휘와 연대하여 독립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승만은 상해에 오래 머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사면하겠다고 하였다.[115] 그리고 이날 오후 김규식이 이승만을 방문하여 "구미위원부에서 일할 때에 분주하여 맨데토리문제를 미처 묻지 못했다"며 위임통치문제를 가혹하게('刻甚') 질문하자 이승만은 공손하고 자세히 대답했다.[116]

2월 24일 밤 노백린·김규식이 다시 이승만을 방문하여 재차 사퇴를 권하고 고문관 자격으로 상해에 머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국민대회나 국무원·의정원의 탄핵을 거쳐야 물러나겠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그러자 노백린은 노령지역과의 원활한 협력을 기하고 국민대표회의가 미국정부에 이승만이 제출한 위임통치청원을 취소하라는 전보를 보

113) 이승만, [비망록], 『우남이승만문서 동문편』, 8, 355쪽.

114) 『한국독립운동사 자료37 : 해외언론운동편』, 기밀 제22호, 「鮮字新聞增設ニ關スル件」, 국사편찬위원회, 2001, 427~428쪽.

115) 이승만, [비망록], 『우남이승만문서 동문편』, 8, 355쪽 ; 안창호, 「일기」, 1921년 2월 27일, 985쪽.

116) 이승만, [비망록], 『우남이승만문서 동문편』, 8, 355쪽.

내려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승만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17] 이승만이 이들의 제의를 재차 거부하자 김규식은 자신들은 대통령이 당연히 사퇴할 것으로 판단하고 선후책을 마련하고자 찾아온 것이라고 말하며 무례히 물러갔다.[118]

김규식은 이승만에게 위임통치 청원문제를 무례하고 가혹하게 따지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하와이에서 상해로 건너와 학무총장에 취임한 후, "한국인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어찌하여 위임통치청원자 이승만을 대통령에 임명했는가라는 각국 인사들의 반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비웃음을 샀다"고 말했다.[119] 그러나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김규식은 이승만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그가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을 강하게 비판한 것은 아마도 신변 보호를 위한 보신성 자구책인 동시에 워싱턴에서 구미위원부 위원장을 지내며 이승만과 불화관계에 빠졌던 쓰라린 경험 때문으로 보인다.[120]

임정 내에서 위임통치 청원문제로 반이승만 기류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1921년 2월경 상해－북경 일원에서 본격적인 반임정 · 반이승만 활동이 태동하고 있었다. 2월 중순경에 박은식 · 최동호 · 원세훈 등 14인이 국민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들은 「我 동포에게 고함」이란 성명서에서 독립운동의 침체와 분열의 원인이 임정 수립 당시 현실과 괴리된 정부조직 및 민족대표성 결여에 있다며 "전국민의 의사에 의한 통일적 정부조직을 수립하고, 여러 방책과 힘을 모아 독립운동의 최고 방침을 세울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노령, 간도, 북경, 상해의 반임정 세력과 연대할 것임을 천명했다.[121] 그런데 여기에 서명한 인사들은 대

117) 안창호, 「일기」, 1921년 2월 27일, 985쪽.

118) 이승만, [비망록], 『우남이승만문서 동문편』, 8, 355~356쪽.

119) 신채호 등, 「성토문」(1921.4.19), 『우남이승만문서 : 동문편』 8, 264쪽.

120) 구미위원부장 재직시절 김규식과 이승만의 갈등관계에 대해서는, 이상훈, 「김규식의 구미위원부 활동」 제4장, 한림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참조.

121) 『한국민족운동사료 : 중국편』, 「반임시정부측의 국민대표회의 개최」(1921.2.18), 276~

부분 박용만이 연해주에 머물 때에 관계를 맺은 인사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반임정운동은 반이승만활동에 다름 아니었다.

임정 안팎에서 반임정·반이승만 운동의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자 이승만은 1921년 2월 28일 임시의정원 제8회 개원식에 참석하여 대통령 교서를 반포했다. 여기서 그는 경신참변과 같은 참화를 자행한 일제에 대해 한국민이 피를 뿌리며 결사 항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오직 실력을 기르고 기회에 부응하여 최후의 승리를 노려야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정의인도를 주장하여 강포무도한 적을 치는데 있으니 혹 개인이나 단체가 적국인에 대하여 비인도적 행동이 없기를 주의할지라," "근래 독립운동을 빙자하여 사익을 추구하는[憑公營私] 무리가 경향에 출몰하여 부호를 위협하고 정부 명의를 칭탁하여 금전을 토색하는 폐단이 있으니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하였다.[122] 이는 외교독립노선의 입장에서 무장투쟁이나 의열투쟁을 비인도적인 행동으로 단정하는 한편, 그들의 군자금 모금행위를 강도짓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처럼 무장투쟁 및 의열투쟁 계열의 독립운동가나 독립단체들을 공개적으로 질타한 것은 상해-북경 일원에 있는 여러 무장투쟁 및 의열투쟁 단체들의 반임정·반이승만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역효과를 낳았다.[123]

1921년 3월 하순경 이승만은 『독립신문』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위임통치 청원문제를 변호하고 나섰다.[124] 2달 전 이동휘와 사상논쟁이 붙었을 때에 각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여 동포들의 의혹을 풀게 하자며 채택한 결의안을 단호히 거부한 것에 비춰보면 이승만의 입장은 분명히 바뀌

277쪽.

122) 『독립신문』 1921년 3월 5일 「대통령의 교서」.

123) 이승만은 1921년 3월 초순 대통령포고 제1호에서 "근래에 국내외에 일부 몰지각한 무리가 정부의 명칭, 문서, 인장을 濫稱하거나 위조하여 종종 국민을 기망하고 위협하여 兵役을 종용하며 금전을 탈취할 뿐 아니라 인민의 생명과 재산까지 해치는 일이 있으니 실로 통탄해 마지않을 일이다"며 무장투쟁론자나 의열투쟁론자의 군자금 모집활동을 다시금 강력히 비판했다. 『독립신문』 1921년 3월 12일 「대통령포고」.

124) 『독립신문』 1921년 3월 26일 「대통령談」.

어 있었다. 이때의 인터뷰는 3월 15일 안창호와 여운형이 "임정을 개조하는 동시에 정부 명칭을 버리고 위원제도로 조직을 변경할 것"을 목표로 국민대표회 준비촉진회를 조직한 것에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적대세력의 반임정·반이승만운동의 초점인 위임통치 청원논란을 사전에 잠재우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위임통치청원 문제에 대한 이승만의 변론은 다음과 같다. 그는 미 국무장관 랜싱(Robert Lansing)으로부터 한국대표가 파리에 갈 수 없으며, 설령 파리강화회의에 가더라도 한국문제를 호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이에 미국 언론에 한국문제를 발표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글을 지어 보냈으나 지상에 실리지는 못했다. 그 후 자신이 신병으로 병원에 있을 때에 정한경이 글을 지어 왔는데, 그 내용은 "한국이 더 불법포악한 일본의 통치하에는 절대로 잇기를 원치 안코 나죵 독립할 목적으로 미국의 위임통치를 밧고져 한다"는 것이므로 이를 신문사와 미 국무성에 보냈다는 것이었다.[125]

이처럼 이승만은 임정의 기관지이자 상해의 대표적 한인신문인 『독립신문』을 통해 무장투쟁 및 의열투쟁 계열의 개인이나 단체를 공개 비판한데 이어 위임통치 청원문제에 대한 최초로 공식적 해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이승만의 진퇴와 직결된 임정개조와 임정유지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임정의 기능 상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승만과 임정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공격수단인 위임통치 청원논란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위임통치 청원논란은 임정의 테두리를 벗어나 상해-북경 일원에서 활동 중인 박용만 같은 무장투쟁론자와 김원봉 같은 의열투쟁론자 등이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이들에게 위임통치청원 반대논리를 제공하며 반임정, 반이승만운동을 이끌어나간 사람은 역시 박용만이었다.

1919년 5월 17일 하와이를 떠나 블라디보스톡으로 건너간 박용만은

125) 『독립신문』 1921년 3월 26일 「대통령談」.

1928년 10월 이해명에게 친일혐의로 저격당할 때까지 원동에서 활동했다. 그는 1919년 하반기부터 1920년 상반기까지 노령 ·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자와 내왕하며 정세판단을 하고 있었다. 1920년 봄에는 대동단 총부 재정부장에 지명되었고, 또 문창범 · 유동열 · 신채호 · 김승학 · 고창일 등과 연해주 수분하 지방에 체류했다. 이어 1920년 여름에 이르쿠츠크와 모스크바에 머물렀고, 9월에 소비에트정부와 비밀조약을 맺고 9월 중순 치타시에 귀환했다. 이어 1921년 봄경에는 북경으로 가서 독립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하기 시작했다.[126] 그런데 1921년 5월 이전 박용만의 행적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박용만과 교류했거나 교류했을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 대부분이 1921년 3월부터 6월경까지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사실이다.

1921년 4월 17일 북경에서 군사통일회의가 열렸다. 이미 임정 출범 후부터 북경에서는 신채호 · 박용만 · 신숙 등이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을 비판하며 세력화하고 있었다. 이 중 박용만은 간도 · 시베리아 · 하와이 및 국내 10개 단체가 참가한 군사통일회의를 개최한 다음, 독립운동계의 군사단체가 총망라된 체계적인 무장투쟁을 펼치려 하였다.[127] 여기에는 박용만세력이 주축을 이룬 가운데 천도교세력, 국민의회세력, 서로군정서세력의 일부가 가담했다. 즉, 군사통일회의 발송문건 대표 17인은 국민공회 대표 박용만, 국민군 대표 김천호 · 박승선 · 김세준, 하와이 대조선독립단 대표 권승근[128] · 김현구 · 박건병, 기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박용만과 관계가 깊은 사이였다. 이로 인해 소련정부의 지원 하에 군사통일운동과 신정부 수립운동을 벌이려던 군사통일회의에

126) 방선주, 「박용만평전」.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113~116쪽.

127) 윤병석, 「1920년대 독립군단과 통합운동」. 『국외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일조각, 1990, 107쪽

128) 권승근은 북경군사통일회의 설립 당시 이승만의 위임통치 사실을 밝히고 영자신문에 실린 위임통치 기사를 공개함으로써 임정과의 협력문제나 참여문제가 논의되던 회의 분위기를 일거에 반임정 · 반이승만으로 바꾼 박용만의 최측근이다. 신숙, 『나의 일생』, 일신사, 1963, 63쪽.

는 독립운동계의 군사단체를 대표하지 못하고 박용만 사설단체에 머물고 말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129] 하여튼 군사통일회의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활동이 바로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군사통일회의는 4월 24일 이승만 등의 '매국매족죄'를 성토하고, 상해임정과 임시의정원을 불승인하고, 이승만과 임시정부가 시행했거나 시행할 시책을 모두 무효로 돌린다는 과격한 전보를 상해로 보냈다.[130] 27일 군사통일회의는 대표 신성모를 상해로 보내 내지국민공회 대표 박용만 등 17인의 공동명의로 임정과 의정원을 불신임하는 내용의 통첩을 전달했다. 거기에는 "임정은 위임통치사건을 일으킨 이승만을 수령으로 삼았으니 존재이유가 없으며, 임시의정원은 위임통치사건의 주모자인 國賊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그 연루자 안창호를 노동국총판으로 선임했으니, 이는 위임통치청원을 묵인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131]

원동 최대의 반이승만 단체인 군사통일회의가 열린 지 이틀 후인 4월 19일에 북경 일대 민족운동자 54인이 공동 연명으로 "이승만 · 정한경 등이 대미위임통치청원, 곧 매국매족의 청원을 제출한 사실을 들어 그 죄를 성토한다"로 시작되는 성토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이승만 · 정한경이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가 되려 한다는 문서를 미국정부에 제출하여 매국매족의 행위를 감행했다"고 비난했다.[132] 이어 5월에 북경유학생회가 "독립을 싫어하고 위임통치를 바라고, 자유를 마다하고 노예가 되기를 좋아하는 이승만과 정한경은 매국매족의 대역적이며, 안창호는 이승만 · 정한경의 죄를 방조한 난적이다"며 이들을 성토했다.[133]

---

129) 북경군사통일회의에 대해서는 조규태, 「북경군사통일회의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5, 2000 ; 이현주, 『1920년대 재중항일세력의 통일운동』 제2장 제2절,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참조.

130) 북경군사통일회의, 「전보」(1921.4.24), 『우남이승만문서 동문편』, 8, 266쪽.

131) 북경군사통일회의, 「통첩」(1921.4.27), 『우남이승만문서 동문편』, 8, 267~271쪽.

132) 『한국민족운동사료 : 중국편』, 「성토문」(1921.4.19), 347~348쪽.

133) 북경유학생회, 「성토문」(1921.5), 『우남이승만문서 동문편』, 8, 272~273쪽.

1921년 5월에 접어들어 군사통일회의는 다시 반임정 · 반이승만운동을 거세게 펼쳤다. 군사통일회의는 4월 27일자 통첩보다 비난 강도가 한층 높아진 선언서와 성토문을 내외에 발표했다. 임정에 전달된 4월 27일자 통첩이 제한적 영향력을 미친 것이라면, 원동 각지에 배포된 5월자 선언서와 성토문은 그야말로 이승만을 이완용 · 송병준과 동일한 매국역적으로 각인시킨 문건이었다.[134] 후자의 문건들은 감성에 호소하는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이승만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위임통치청원이 3 · 1운동 이후에 나온 것처럼 왜곡하여 기술했고, 위임통치청원으로 미국민의 대한독립 후원의지가 약화되었다고 했으며, 위임통치청원이 나오자 일본이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며 한국민 탄압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하였고, 이승만이 위임통치청원서를 미국정부에 직접 제출하여 한국민을 팔아먹으려 했다는 등등의 내용들이 실려 있었다.[135]

1921년 5월에 군사통일회의의 반임정 · 반이승만운동에 호응하는 간도지역의 독립단체들이 대표회를 소집했다. 5월 5일 간도지역의 독립단체들은 길림성 액목현에서 회의를 열고 임시의정원에 정부개조를 요구하고, “위임통치를 청원한 것이 확실하다면” 그 당사자의 퇴진을 요구한다는 등 5개항의 결의서를 채택하고, 이를 서간도 출신 의원 윤기섭을 통해 임정에 전달했다.[136] 이와 동시에 북경의 의열투쟁 단체들도 이승만과 임정 공격에 나섰다. 이들이 행동에 착수한 데에는 이승만이 『독립신문』 지상을 통해 의열투쟁을 강한 어조로 두 차례나 공개 비판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137] 그리하여 북경의 의열단 단장 김원봉과 모험단원 10여 명은 이승만을 사퇴시키고 모종의 테러를 가하기 위해 동지들과 상해로 이동하여 활동했다.

---

134) 군사통일회의, 「선언서」(1921.5) · 「성토문」(1921.5), 『우남이승만문서 동문편』, 8, 275~290, 291~310쪽.

135) 군사통일회의, 「성토문」(1921.5), 『우남이승만문서 동문편』, 8, 291~310쪽.

13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4, 1973, 516~517쪽.

137) 『독립신문』 1921년 3월 12일 「대통령의 포고」.

1921년 5월 17일 이승만은 신내각이 출범하여 각원들의 질서가 잡혔으니 적체된 서무가 차례차례 집행되기를 기대하며, 자신은 "외교상 긴급과 재정상 절박"으로 인하여 상해를 떠난다는 교서를 의정원에 보냈다.[138] 5월 19일 이승만은 상해 인근 吳淞으로 이동하여 포트호텔에 투숙했다. 이는 의열투쟁과 무장투쟁을 공개 비판한 대통령 교서에 분개하여 이승만을 징치하려던 의열투쟁 청년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어 28일 밤 10시 상해 체류 기간 동안 거처를 내어준 안식교 선교사인 미국인 크로푸트 부부의 전송을 받으며 콜롬비아호(S. S. Columbia)에 승선하여 6월 29일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다.[139] 이승만이 상해를 떠난 후에 상해 일원 한인사회에 떠돈 소문을 보면 군사통일회의의 이승만 비난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 근래 상해에 음흉한 말이 나돌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대통령(이승만: 필자)을 구타하고 李完用과 같다고 질책하였다"고 하며, 또 "대통령이 소학교에 같더니 어린 아이들이 이완용과 같은 놈이라고 하며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여 대통령이 돌아갔으며 세 번을 그같이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 사실을 은밀히 탐문해 보니 허무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잘못 전해진 말이 각지에 전파되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사람도 있을 듯합니다.
>
> 또 일본 신문이나 한국 신문에 각하가 도망했다고 악선전하며, 중국인이나 서양인에게도 이같이 전하며, 李선생은 위임통치를 주장한 사람이라고 선전하여 내외의 신망을 추락시키고자 하는 모양입니다. 피치(George A. Pitch) 씨가 呂運弘을 초청하여 묻기를 "이박사가 대통령에서 교체되고 미국으로 도주하였다 하니 사실인가" 하매 여운홍의 대답이 "미국으로 간 것은 사실이나 교체되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고 하였다 합니다.
>
> 이러한 음흉한 유언비어로 악선전하는 중이며, 북경에서는 성토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또 내외에 악선전하며, 각하가 3월 1일 이후에 위임통치를 청원했으며 지금도 위임통치운동을 하는 중이라 하며, 1910년에

138) 『독립신문』 1921년 5월 31일 「대통령의 교서」.

139) *Log Book of S.R.*, 1921년 5월 19일~6월 29일.

> 한국 주권자가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과 李某(이승만: 필자)가 한국통치권을 미국에 위임하기를 청원한 것은 다 동일한 의미요 동일한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북경에 재류하는 청년이나 한국에서 새로 상해로 건너온 청년들은 이를 잘못 듣고 도리어 이를 다시 널리 전파하는 중입니다.[140]

위 기사에 나오는 의열청년들의 이승만 구타설, 소학교 방문 시의 봉욕설, 이승만의 하와이 도주설,[141] 위임통치청원의 지속적 추진설, 한국통치권의 미국위임설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이승만 타도를 목표로 하는 이러한 온갖 거짓소문들이 중국을 비롯한 원동 각지에 널리 퍼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이승만과 그의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입지와 안위를 위해 나름의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3) 위임통치청원 비판에 대한 이승만세력의 반박

1921년 4~5월경 상해－북경 일원에서 박용만을 위시한 무장투쟁론자들은 반임정·반이승만을 목표로 위임통치청원 반대운동을 거세게 벌였다. 이때 이승만의 적대자인 박용만이 주도하는 북경의 군사통일회의는 이승만·정한경의 위임통치청원 관련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면서까지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게다가 하와이에서는 이승만의 지지자였다가 적대자로 돌아선 현순이 수차의 성명서를 통해 위임통치 청원문제를 거론하며 이승만을 강력 비판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원동과 미국의 이승만세력은 권위와 위상에 심대한 상처를 입었다.

이승만세력은 1921년 6월 중순경부터 반격에 나섰다. 우선 미국 본토의 정한경이 위임통치 청원논란에 대한 적극적 해명에 나섰고, 6월 29일 하와이에 도착한 이승만도 측근들과 함께 해명운동에 가세했다. 당시 이

---

140) 『이승만 동문 서한집』 하, 장붕→이승만(1921.6.18), 262~263쪽.

141) 이승만은 1921년 4월 16일 상해 비커톤旅社 만찬에서 지지자들에게 도미의사를 공표하고, 5월 17일 내각에 도미의사를 전달한 다음, 5월 29일 상해를 떠났다.

승만세력이 적극적으로 자기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아래와 같이 매국노로 몰리는 불리한 상황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 위임통치문제에 대하여 많은 인사가 불평하고 반대운동을 시도하므로 착오는 착오로써 전하여지고, 이승만, 정한경, 민찬호 씨 등이 이완용·송병준이 왜놈에게 팔아버린 국가와 민족을 거듭 미국인에게 전매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칭하고 있다. 또 말하기를 재작년 3월 1일 독립선언 후 2천만 민족이 피와 눈물로써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움을 계속하면서 적의 기반을 벗어나려고 하는 인민을 도리어 미국에다 인질로 하였다. 아니 지금은 오히려 이를 전파하려고 하는 욕망을 달성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는 민족의 적이다. 제2의 이완용, 제2의 송병준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고, 또 만일 하루아침에 미국이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이 청원하는 위임통치를 실행하려 한다면 그때에는 누가 나서서 이를 막을 것인가라고 공격하고 이를 내외에 선전하는 자가 있다.[142]

1921년 6월부터 이승만세력은 하와이와 상해－북경에서 위임통치 청원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다각도의 활동을 펼쳤다. 비난의 표적이 되었던 이승만은 이면에 앉아있고 그의 측근과 지지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반박문건을 작성하여 위임통치청원 반대운동에 대항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때 위임통치 청원논란의 주역이자 그 전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미 본토의 정한경, 이승만의 사조직인 하와이의 대한인동지회와 그 임원인 민찬호·안현경·이종관, 상해－북경－천진의 이승만 지지단체인 협성회[143]·북경독립단[144]·천진한민회[145] 등이 박용만세력과 현순의 위임통

142) 『한국독립운동사 자료3』, 국사편찬위원회, 1973, 248~249쪽.

143) 협성회는 ① 임시정부 절대 옹호, ② 광복 정신과 協進主義를 고취·장려, ③ 국세 납입 독려, ④ 군사의 服習을 督進 등 4개항을 강령으로 하는 상해 일원의 이승만 친위단체였다. 한시준, 「이승만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이승만연구』, 연세대 출판부, 2000, 192~193쪽.

144) 실체가 불분명한 북경독립단은 독립운동적 성격이 강한 북경고려기독교청년회일 가능성이 높다. 조규태, 「1920년대 북경고려기독교청년회의 종교활동과 민족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31, 2009, 172쪽.

145) 천진한민회는 기독교계열의 독립운동단체로서 천진 일대에서 임정 후원활동을 벌

치 반대운동을 반박하고 나섰다. 원동과 미국에서 동시에 벌어진 이들의 반박활동은 위임통치 청원논란을 가라앉히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승만세력이 작성하여 미국과 원동 각지에 살포한 반박 문건은 크게 네 종류이다. 즉, ① 「야릇하게 떠들어오는 '맨데토리' 문제의 내용」,[146] ② 「위임통치에 대한 사실」,[147] ③ 「痛告文」,[148] ④ 기타 문건[149] 등이다. 이들 문건들은 이승만의 사저인 이화장에 소장되어 있던 이승만문서에 포함되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이승만세력이 위임통치청원 반대운동에 대해 어떠한 논리를 동원하여 반박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담긴 이승만세력의 반박논리를 갈래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승만세력은 자신들에 적대적인 박용만세력이 위임통치청원 반대운동의 시발자임을 밝혔다. 예컨대, 그들은 "이 문제로 가장 처음부터 악선전한 사람은 박용만이와 그 추종자들이라. 그 사람들이 이전부터 지낸 일과 지금 하는 소위를 보면 정부는 없다 하고 자기의 군정부(대조선국민군단:필자)가 모든 독립운동을 다하는 모양으로 내지와 外洋에 글을 보내 재정을 얻어다가 무엇을 하여 없애는 것을 세상이 다 아는 바이다. 이 사람들이 무슨 독립에 충성이 있어서 이대통령을 공박하는 줄로 믿을

였다. 이 단체는 천진불변단(1919)→대한민단(1921년 초)→한민회(1921.7) 등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146) 총 16쪽 분량이며, 정한경이 1921년 6월 15일 작성한 후 상해의 협성회 간부들에게 7월 14일에 보낸 것이다. 머리말, 정한경이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1921.6.13), 정한경이 이광수에게 보낸 편지(1921.6.13), 위임통치청원서 원문의 번역문이 포함된 「맨데토리문제의 진상」, 맺음말 등으로 되어 있다.

147) 총 8쪽 분량이며 주로 하와이와 미주에 배포되었다. 민찬호 · 안현경 · 이종관 공동명의의 「위임통치에 대한 사실」(1921.7), 위임통치청원서 원문의 번역본인 「북미합중국 대통령 각하」, 정한경이 현순에게 보낸 「정한경씨의 편지」(1921.5.28), 현순의 이승만 비판을 반박한 「현순의 행동」 등으로 되어 있다.

148) 1921년 8월 10일자 북경독립당과 천진한민회 공동 명의 문건이다. 재중동포, 군사통일회의, 통일책진회, 북경유학생회, 국민대표회의 담당자 등에게 보내는 5점의 성명서로 되어 있다.

149) 이는 이승만의 사조직인 대한인동지회가 작성한 현순의 성명서에 대한 반박문인 「현순의 성명서에 대하여」(1921.7.16), 정한경이 상해의 이승만 지지단체 협성회에 보낸 「협성회 간사부원 첨좌하」(1921.8.15) 등이다.

사람이 없을 것이라. 다만 그 사심과 악감에서 나온 것뿐이요"라고 지적했다. 이는 자신들과 패권다툼을 벌인 박용만세력이 사심과 악감정에서 위임통치 청원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했을 뿐더러 그들의 무장독립운동이 실효성 없이 자금만 낭비하는 허무한 사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150] 이에 대해 이승만도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 맨데토리문제로 말하면,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친우 정한경이 윌슨대통령과 파리강화회의에 보내는 청원서를 지어가지고 와서 보라 했습니다. 그때 형편으로는 독립을 달라 하면 세인의 비웃음만 사게 될 것이니, 미국정부의 맨데토리로 얼마간 두었다가 독립을 완전히 하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인의 동정을 얻을 것이요, 입을 열기도 비교적 쉽겠다고 하기에,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청원서에 서명하여 한 장은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중략) 그 청원서는 3·1운동 이전에 보낸 것이니 형편이 크게 변한즉 다른 나라도 평화 시절에 했던 것을 전시 이후에 변경하는 것이 보통 있는 일이라. 다만 하와이의 극소수인이 저를 백방으로 방해하여 이 일을 들어 각처에 전보하고 대사건을 만들려 하는 것뿐입니다.[151]

둘째, 이승만세력은 「야릇하게 떠들어오는 '맨데토리' 문제의 내용」과 「위임통치에 대한 사실」 등에서 위임통치청원서 원문의 번역본을 전격 공개했다. 특히 전자의 번역본 서두에는 위임통치청원서 내용을 총정리하여 "① 열강은 한국을 학정하에서 구출하며, ② 열강은 한국의 장래 완전 독립을 보증하며, ③ 한국을 아직 국제연맹 통치하에 둘 일"이라는 간략한 요약 문구를 실었다.[152] 이는 반대세력이 위임통치 청원 구절만을 떠내어 자신들을 이완용·송병준과 같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동일시하는 것을 비판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위임통치 청원행위가 결코 매국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한 애국적 동기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150) 민찬호·안현경·이종관, 「위임통치에 대한 사실」, 『우남이승만문서 : 동문편』 8, 312쪽.
151) 『이승만 동문 서한집』 하, 안현경→이승만(1919.12.3), 9쪽.
152) 『우남이승만문서 : 동문편』 8, 「야릇하게 떠들어오는 '맨데토리' 문제의 내용」, 326쪽.

였다. 나아가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나 완전독립의 달성을 담보하기 위한 일시방편으로서 위임통치를 청원했음을 항변하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이승만세력은 자신들의 위임통치청원 행위가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벌어진 것임을 강조했다. 예컨대 그들은 "위임통치문제에 서명함으로 말할지라도 내지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한인들은 다 잠자는 모양이라. 홀로 나서서 세상 사람에게 대하여 한인들도 독립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려 하매 조선을 일본 관할에서 빼어내서 몇 해 안에 완전독립을 회복할 담보로 국제연맹회에 위임하자 한 것이 그때 세계 형편에 적당히 될 줄로 생각하고 서명한 것이라. 내지에서 독립선언을 한 후에 본즉 일시 문자상 실수라고는 할지언정, 독립의 사상이 불철저하다든지 독립을 원치 않고 위임통치를 주장한다고 하는 말은 모함하는 자의 일시 구실 뿐이라"라고 하였다.[153] 이는 위임통치청원이 3·1운동 발생 이전에 한국민의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며, 위임통치청원 당시 일시 문자상 실수가 있을지언정 독립사상이 불철저하다거나 독립을 원치 않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넷째, 이승만세력은 위임통치 청원문제에 안창호와 대한인국민회가 관계했다는 사실을 거의 모든 문건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었다. 예컨대, 이승만의 측근들이 미국 각지에 전포한 문건에는 "정한경 씨가 桑港 국민회 총회장 안창호 씨에게 문의하여 안창호 씨가 임원회에 들여놓아 결의하여 公函으로 정씨에게 지휘하여 그대로 하라 하였다"고 하였다.[154] 또한 정한경은 각기 안창호와 이광수에게 보낸 1921년 6월 13일자 두 통의 편지에서 자신이 국민회 총회장인 안창호에게 서면으로 문의하자 안창호가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가결한 후 자신에게 청원서를 보내도록 지시했음을 밝혔다.[155] 특히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에는 안창호와 국민회 임

153) 민찬호·안현경·이종관, 「위임통치에 대한 사실」, 『우남이승만문서 : 동문편』 8, 312쪽.
154) 민찬호·안현경·이종관, 「위임통치에 대한 사실」, 『우남이승만문서 : 동문편』 8, 314쪽.
155) 「야릇하게 떠들어오는 '맨데토리' 문제의 내용」, 『우남이승만문서 : 동문편』 8, 322~324쪽.

원들이 위임통치청원서 발송에 깊이 간여했으며, 안창호가 정한경에게 보낸 공함('認可狀')을 정한경이 보관하고 있음이 잘 나타나 있다.[156]

> 무릇 전일에 박용만 씨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와이에서 불평운동을 시도했으나 뜻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이번에 또 김규식 씨가 이를 시도한 것은 선생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처음 제가 李박사와 함께 국민회 대표로서 파리로 가려 하다가 끝내 가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당시의 정세에 의하여 위임통치문제를 (파리평화)회의에 제출하고자 하여 선생께 문의했습니다. 그때 선생은 대한인국민회 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 가결하였으니 그대로 행하라는 인가장(認可狀)을 저에게 보내오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받은 후 1919년 2월 25일에 이 문제를 미국대통령 윌슨 씨에게 제출했으며, 위에 기록한 여러 원문은 저의 수중에 있습니다.[157]

다섯째, 북경독립단 · 천진한민회 등 원동의 이승만세력은 박용만세력의 위임통치 반대운동이 임정을 타도하려는 정치적 성격을 지닌 것임을 지적했다. 그들은 재중동포에게 태평양회의를 앞둔 시점에 위임통치문제를 둘러싼 당파싸움의 폐해를 경계해야 한다고 통고했다.[158] 또 군사통일회의에 대해 대표성이 결여된 일부 인사들의 사설단체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다음, 군사통일회의의 주장처럼 위임통치 청원문제가 한국독립운동에 심대한 폐해를 가져온 문제는 아니며, 위임통치청원의 당사자인 이승만 등을 비판하는 것은 혹여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를 빌미로 임정을 전복하려 기도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군사통일회의에 경고했다.[159] 나아가 그들은 통일책진회가 위임통치 청원문제를 빌미로 삼아 임정을 타도하고 신정부를 수립하려는 것은 '반역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강하게 질타했다.[160]

---

156) 「야릇하게 떠들어오는 '맨데토리' 문제의 내용」, 『우남이승만문서 : 동문편』 8, 322쪽.
157) 『우남이승만문서 : 동문편』 7, 「안창호씨에게 온 편지」, 322~323쪽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3』, 정한경→안창호(1921.6.12), 249~250쪽.
158) 『우남이승만문서 : 동문편』 8, 「痛告재중동포」, 339~340쪽.
159) 『우남이승만문서 : 동문편』 8, 「痛告군사통일회의」, 341~343쪽.

여섯째, 이승만세력은 미국에 위임통치를 요청하여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려 했다는 반대세력의 주장을 비판했다. 그들은 반대파의 주장처럼 이승만·정한경이 미국정부에 위임통치를 직접 청구한 것이 아니라 미국정부를 통해 국제연맹 하의 위임통치를 청구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한 위임통치청원서가 실제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 청원서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임통치청원으로 인해 한국이 미국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현순이나 군사통일회의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1921년 6~8월경 이승만세력은 많은 문건을 통해 위임통치 반대운동에 대한 반박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갔다. 그들의 효과적인 반박활동에 이어 미국에서 개최된 워싱턴군축회의와 원동에서의 국민대표회의 소집 문제가 당면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위임통치 청원 논란은 점차 가라앉게 되었다.

약 1년 반 후인 1923년 1월 10일 국민대표회의 자격심사회의에서 임시의장이자 북미국민회 대표인 안창호의 자격문제가 불거졌다. 그러자 심사위원들은 '위임통치청원 관련자'인 안창호의 대표자격 문제를 두고 ① 위임통치 청원문제를 자세히 조사하여 완전히 판명될 때까지 그의 자격을 보류하자는 안, ② 위임통치를 청원했다고 하더라도 3·1운동 이전의 일이니 자격을 인준함이 가하다는 안, ③ 타일에 회의에 부쳐 심판할 셈치고 우선 대표자격을 인준하자는 안 등 세 가지 안으로 갈려 대립했다.[161] 다음날 열린 회의에서 "위임통치문제는 과거의 사실이니 타일에 한 번 토론하여 보기로 하고 우선은 안창호를 북미국민회 대표로 인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어진 회의에서 위임통치청원자가 자신의 이전 주견을 포기하면 누구나 받아들이자는 이상호의 주장에 대해 재청이 있었고, 아울러 안창호의 국민대표회의 임시의장 사면서를 반환하기로 하

160) 『우남이승만문서 : 동문편』 8, 「痛告군사통일회의」, 344~347쪽.
161) 『독립신문』 1923년 1월 24일 「회의 제3일」.

였다.[162] 위임통치 청원논란의 또 다른 당사자인 안창호가 국민대표회의에 참가한 여러 독립운동세력들로부터 위임통치 청원문제를 사면받음으로써 이제 위임통치 청원문제는 공식적 차원에서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지 못하였다.

5. 맺음말

이제까지 한국근대사 연구자들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를 연구·평가할 때에 온건론보다는 급진론을 더 중시해 왔다. 그들은 온건론에 속하는 외교독립론이나 실력양성론에 대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개량주의 노선에 불과할 뿐이라며 홀대했던 반면, 그 대척관계에 놓인 독립전쟁론이나 의열투쟁론에 대해서는 민족과 개인의 고귀한 이상을 실현하려 했다고 호평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한국실정과 국제정세를 냉정히 따져볼 경우, 전자의 운동형태가 후자의 운동형태에 비해 결코 저급했다거나 성과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한국인들이 전개한 외교독립론을 대표하는 이승만·정한경·김규식 등의 위임통치청원서에 담긴 실력양성론적 외교독립론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독립운동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이승만·정한경의 위임통치청원론은 "장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분명한 전제조건 하에" 한국을 일정 기간 동안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아래 두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급진적 혁명론을 주창한 신채호는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은 역적이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지금도 이 말은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을 비난하고 신채호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순결성을 강조할 때에 자주 언급되곤 한다. 그러나 신채호는

162) 『독립신문』 1923년 1월 24일 「회의 제4일」.

위임통치청원론이 한국의 통치권을 미국에 넘기려는 망국적인 매국논리가 아니라 한국여건과 국제정세를 감안한 단계적 · 점진적인 독립구상이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거나 무시했다. 한마디로 위임통치청원론은 이완용의 매국행위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한국의 독립을 위한 방안이었고 우국충정의 소산물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위임통치청원론은 국제정세에 정통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구상하게 되는 구국외교론이다. 이제까지는 이승만과 정한경이 전적으로 위임통치청원서를 작성했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그 청원서를 작성할 때 두 사람은 국제법에 정통한 일부 외국인과 한중 양국의 여러 친우들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그 청원서를 윌슨대통령에게 제출하기 전에 국민회 중앙총회장 안창호와 기타 임원들의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이승만 · 정한경의 위임통치청원서는 미주 한인사회를 양분한 이승만계와 안창호계의 합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신한청년당의 파리강화회의 대표로 활동한 김규식도 이승만 청원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파리강화회의 의장에게 제출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제연맹 출범기에 외교독립운동을 벌인 온건성향의 한국인들이 위임통치청원론을 독립구상의 일단으로서 공유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론은 굳건한 독립정신과 냉철한 국제정세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승만은 개화기 이래 민중계몽론을 주장한 근대지향적 독립운동가였다. 그는 미국식 민주주의, 기독교사상, 서양 근대문명 등을 한국에 이식함으로써 한국을 미국형 선진국가로 만들려는 계몽사상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정치개혁을 추진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일반 민중의 정치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정도로 친미적 엘리트 의식이 강했다. 그는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와 미일간 우호관계 속에서 한국민이 자력으로 독립을 이루는 것은 당분간 힘들다고 판단하고, 약소국가에 가장 시혜적인 나라라고 판단한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한국독립의 기초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위임통치청

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승만 · 정한경 · 김규식의 위임통치청원론은 1910년대 말경의 한국실정과 국제정세를 감안하여 제기한 현실적 차선책이었다. 그들은 즉각적 완전독립이라고 하는 최선책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단계적 · 점진적인 현실적 차선책을 모색했던 것이다. 그들은 민족자결주의가 고취되고 국제연맹이 창설되는 유리한 국제정세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파리강화회의에 한국의 위임통치를 청원했다. 그런데 그들의 위임통치청원론을 주체적 독립운동 부정론으로 규정하는 것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일제 식민통치에 항거한 외교독립운동가들에게 너무 가혹한 평가기준을 들이대는 것이다. 오히려 위임통치청원론이 국제외교무대에서 활동하며 일제의 강대한 국력을 직접 체험한 독립운동가들이 고심 끝에 찾아낸 외교구국방략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승만 · 정한경 · 김규식의 위임통치청원론에는 위임통치 기간 동안 영세중립국의 지위를 누리며 착실히 실력을 배양함으로써 자주독립의 기반을 닦으려 했던 준비론적 외교독립론이 담겨있다. 이승만 등은 한국이 비교적 은혜로운 기독교 민주주의국가인 미국의 위임통치를 받음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중립화를 달성하고, 중립국 체제의 자치적인 정치환경에서 내치의 자유를 누림으로써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만국과의 자유통상을 통해 착실히 국부를 증대시켜 나감으로써 경제력을 굳건히 다지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미일전쟁의 발발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완전독립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점진적 · 단계적인 독립구상을 위임통치청원서에 담아냈다. 따라서 위임통치청원론은 그 비판론자들이 제기하는 바와 같은 무비판적인 친미적 사대외교론이 아니라 '독립정신에 바탕한 실력양성론적 외교독립론'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승만의 상해임정 대통령 재직 시에 벌어진 위임통치 청원논쟁은 위임통치청원서의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상태에서 전개된 것이다.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국독립운동계에서 위임통치청원서의 내용이나 성격에 대한 진지한 분석을 가한 비판적 해석이 나온 적은 없었다. 즉, 한국독립운동가들은 위임통치청원론을 독립운동계의 고질적 병폐인 패권다툼의 소재로서만 활용했을 뿐이며, 그것을 깊이 분석하여 그 장점을 한국의 신국가 건설전략에 채용하겠다고 하는 전향적 자세를 갖지는 못했던 것이다. 요컨대 한국독립운동계에서 위임통치 청원논쟁은 위임통치청원의 합목적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나 논쟁이 수반된 것이 아니라 적대적 경쟁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패권다툼의 소재로만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고 하겠다.

위임통치 청원논쟁 당시 이승만을 이완용과 같은 매국역적으로 몰아간 것은 하와이에서 대립·갈등한 이승만세력과 박용만세력의 세력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승만 등의 위임통치청원론을 가장 먼저 비판하고 나선 것은 박용만세력이며, 꺼져가던 위임통치 청원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것도 박용만세력이었다. 양측의 패권다툼은 단순히 반대세력을 타도하고 말겠다는 망국적인 당파논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1910년대 중반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면서 뚜렷이 갈라진 노선차이에 기인한다. 외교독립론과 실력양성론을 추구한 이승만과 대조선국민군단을 창설하여 동포들에게 무장군사훈련을 시키며 독립전쟁론을 주창한 박용만은 인적·물적 자원이 한정된 좁은 하와이땅에서 양립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이들의 선명히 대비되는 사상투쟁은 1919년 2월 이승만이 자신의 외교독립론의 정수가 담긴 위임통치청원론을 제창하면서부터 본격화하여 1921년 봄－여름경 한국독립운동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위임통치 청원논쟁을 빚어냈던 것이다.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제도는 국제연합의 신탁통치제도와 같은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양자 공히 전후 피식민지 처리방안으로 고안된 장치이다. 해방 후 한국은 3년간 미군정의 통치를 받았는데, 이는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은 것이나 진배없다. 다시 말해 한국이 위임통치에 해당하는 미국 지배를 3년간 받은 후에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를 통해 남한만의 자주적

민족민주국가를 수립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한국은 신탁통치하에서 인민들에게 민주주의를 교육시켜 민력을 키우고 인민의 자유선거와 만국과의 자유통상을 통해 신국가를 건설함으로써 세계사상 유례없는 성공신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위임통치와 같은 신탁통치를 거쳐 부국강병을 달성한 근대국가로 성장해나갔던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무장투쟁론을 중시한 급진적 독립운동가들은 위임통치를 청원한 이승만을 매국노라고 비판했지만, 그러나 한국현대사의 진로는 이승만이 구상하고 내다본 궤적을 밟으며 나아갔음을 유념해야 한다.

■ 투고일 : 2012. 2.10 / 심사완료일 : 2012. 3.20 / 게재확정일 : 2012. 4. 6
■ 주제어 : 이승만, 정한경, 김규식, 안창호, 박용만, 위임통치, 파리평화회의, 국제연맹, 대한민국임시정부, 위임통치청원, 반임정 · 반이승만운동, 외교독립론, 영세중립국

❖ 참고문헌

『대한매일신보』, (상해판)『독립신문』, 『신한민보』, *New York American*, *The New York Times*, 『태평양잡지』, 『혁신공보』.

姜德相 편, 『현대사자료25 : 조선(1)』, 동경 : みすず書房, 1965.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3, 탐구당, 1967.

_____ 편,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제2~3권, 국사편찬위원회, 1973.

_____ 편,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7』, 국사편찬위원회, 2001.

_____ 편,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2, 국사편찬위원회, 2005.

김규식, 「한국위원이 講和會에 제출한 13개조」(1919.4.3), 독립기념관 소장본.

김규식, "TO THE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1919.4.5), 미 국회도서관 Wilson Papers, Microfilm, Reel No.339.

김원용, 『재미한인50년사』, 혜안, 2004.

김창숙, 『(국역)심산유고』, 국역심산유고간행위원회, 1979.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 : 중국편』,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7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4, 1973.

신 숙, 『나의 일생』, 일신사, 1963.

안창호, 「일기」, 『도산안창호전집』 4, 도산안창호전집편찬위원회, 2000.

여운홍, 『몽양 여운형』, 청하각, 1967.

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편, 『우남이승만문서 : 동문편』 8, 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1998.

유영익 · 송병기 · 이명래 · 오영섭 편, 『이승만 동문 서한집』 전3권, 연세대 출판부, 2009.

유영익 · 오영섭 등편, *The Syngman Rhee Correspondence in English, 1900~1948*, Vol. 2, 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2009.

이기형, 『몽양 여운형』, 실천문학사, 1984.

Syngman Rhee, Log Book of S. R.,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소장본.

이승만, 『독립정신』, 정동출판사, 1993.

이승만 저, 정인섭 역, 『이승만의 전시중립론』, 나남출판, 2000.

정두옥, 「재미한족독립운동실기」, 『한국학연구』 3,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991.

Henry Chung(정한경), "Korea Today－A Korean View of Japan's Colonial Policies," *ASIA*, Vol. 19, No. 5, 1919.5.

주요한, 「전기편」, 『안도산전서』 상, 범양사, 1990.

현 순,「華盛頓外交實記」.
立作太郎,『國際聯盟 規約』, 國際聯盟會, 1932.

고정휴,「독립운동기 이승만의 외교노선과 제국주의」,『역사비평』31, 1995년 겨울호.
김기석 편,『고종황제의 주권수호 외교』, 한국교육사고, 1994.
김희곤,『중국관내 한국독립운동단체 연구』, 지식산업사, 1995.
반병률,『성재 이동휘 일대기』, 범우사, 1998.
방선주,『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손세일,「국제연맹의 위임통치청원」,『이승만과 김구』1~3, 나남, 2008.
양영석,「위임통치청원(1919)에 관한 고찰－그 비판과 반론」,『한국학보』49, 1987.
오영섭,「이승만의 대한민국임시정부 통치구상」,『한국민족운동사연구』61, 2009.
_____,「하와이에서 이승만의 언론활동」,『이승만과 하와이 한인사회』, 연세대 출판부, 2012.
유영익,「개화기의 대미인식」,『한국인의 대미인식』, 민음사, 1994.
윤대원,『상해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서울대 출판부, 2006.
윤병석,『국외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일조각, 1990.
이상훈,「김규식의 구미위원부 활동」, 한림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이우진,「임정의 파리강화회의 외교」,『한불외교사』, 평민사, 1987.
이태훈,『일제하 친일정치운동 연구』, 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이현주,『1920년대 재중항일세력의 통일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정병준,『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005.
조규태,「북경군사통일회의의 조직과 활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15, 2000.
_____,「1920년대 북경고려기독교청년회의 종교활동과 민족운동」,『한국기독교와 역사』31, 2009.
최정수,「이승만의『미국의 영향 하에 성립된 중립론』과 외교독립론」,『이승만의 정치사상과 현실인식』, 연세대 출판부, 2011.
프란크 볼드윈,「윌슨, 민족자결주의, 3·1운동」,『3·1운동50주년기념논문집』, 동아일보사, 1969.
한국근현대사학회 편,『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80주년 기념논문집』상·하, 국가보훈처, 1999.
한시준,「이승만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이승만 연구』, 연세대 출판부, 2000.
홍선표,「1920년대 유럽에서의 독립운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27, 2006.
홍용표,「이승만의 대외인식과 임시정부 초기 독립외교」,『대한민국임시정부의 현대사적 성찰』, 나남, 2010.

長田彰文,『日本の朝鮮統治と國際關係－朝鮮獨立運動とアメカ』, 동경: 平凡社, 2005 (나가타 아키후미 저, 박환무 역,『일본의 조선통치와 국제관계』, 일조각, 2008).

Robert T. Oliver, *Syngman Rhee : The Man Behind the Myth*, New York: Dodd Mead and Company, 1955.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Neutrality Trading," Amsterdam : North Holland, 1981.

✪ 국문요약

대한민국임시정부 초기 위임통치 청원논쟁

오 영 섭

이 논문은 한국독립운동사에서 큰 쟁점 중 하나인 위임통치 청원논쟁을 다룬 것이다. 위임통치청원서란 이승만 · 정한경 · 김규식 등이 3 · 1운동 직후에 윌슨 미대통령을 통해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하려던 문건이다. 여기에는 "장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분명한 전제조건 하에" 한국을 일정기간 동안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아래 두어달라는 구절이 들어있다.

이승만과 정한경은 위임통치청원서를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두 사람은 국제법에 정통한 외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청원서를 작성한 후, 국민회 중앙총회장 안창호의 검토와 승인을 거쳤다. 또한 신한청년당 파리강화회의 대표 김규식도 위임통치청원서를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했다. 이것은 온건성향의 독립지사들이 위임통치청원론을 독립구상으로서 공유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한국독립운동가들이 제기한 위임통치청원은 1910년대 말경의 한국실정과 국제정세를 감안한 현실적 차선책이었다. 그들은 민족자결주의가 고취되고 국제연맹이 창설되는 유리한 국제정세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위임통치를 청원하였다. 이러한 위임통치청원은 망국적 매국논리나 친미적 사대외교론이 아니라 독립정신에 기초한 실력양성론적 구국외교론이다.

이승만 · 정한경 · 김규식의 위임통치청원론에는 중립국의 지위 하에서 실력을 길러 자주독립의 기반을 닦자고 하는 점진적 · 단계적인 독립구상이 담겨있다. 그들은 미국의 위임통치 하에서 한국이 일정 기간 중립국의 지위를 누리며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세계 각국과의 자유통상을 통

해 경제력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미일전쟁과 같은 대사건이 일어날 경우에 완전독립을 달성한다고 하는 원대한 독립구상을 위임통치청원서에 담아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초기에 벌어진 위임통치 청원논쟁은 독립노선의 차이에 따른 사상투쟁과 적대적 경쟁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패권다툼의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그 논쟁은 반임정 · 반이승만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한국독립운동가들은 위임통치청원서에 담긴 외교독립론을 한국의 신국가 건설전략에 채용하려는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갖지는 못했던 것이다.

위임통치 청원논쟁은 이승만세력과 박용만세력의 세력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위임통치청원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것은 박용만세력이다. 양측의 대립은 1910년대 중반 하와이에서의 독립운동 과정에서 뚜렷이 갈라진 노선차이에 기인한다. 외교독립론과 실력양성론을 추구한 이승만과 독립전쟁론을 주창한 박용만은 하와이에서 양립하기 어려운 사이였다. 이들의 사상투쟁과 세력경쟁은 위임통치청원을 둘러싸고 중국 대륙에서 다시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제도와 국제연합의 신탁통치제도는 모두 戰後 피식민지 처리방안으로 고안된 장치이다. 한국은 해방 후 미군정의 지배를 3년간 받은 후에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를 통해 남한만의 자주적 민주국가를 수립하였다. 따라서 한국이 위임통치와 같은 신탁통치를 거쳐 부국강병을 달성한 근대국가로 성장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 영문요약

Disputes over the petition for mandate in the early stage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h, Young-Seob

This thesis deals with one of the biggest issues in the history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the dispute over the petition for mandate. The petition for mandate is the document which Rhee, Syng-man, Jeong, Han-kyeong, Kim, Kyu-sik and others tried to submit to Paris Peace Conference through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omas Woodrow Wilson right after the Samil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document, there is a paragraph asking to place Korea under the League of Nations mandat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under the definite precondition to guarantee complete independence of Korea in the future.

Rhee, Syng-man and Jeong, Han-kyeong submitted the petition for mandate to President Wilson. After drawing up the petition with the help of foreigners having a thorough knowledge of the international law, they underwent review and received approval from Ahn, Chang-ho, chairman of Korean National Association. Also Kim, Gyu-sik, the delegate of Shinhan Youth Party to Paris Peace Conference submitted the petition for mandate to Paris Peace Conference. These show that the moderate independence activists shared the theory of the petition for mandate as a plan for Korea's independence.

The theory of the petition for mandate which was raised by the independence activists was the realistic second best policy considering the Korea's actual circumstances and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t the end of 1910s. In order to utilize the advantageous international situation of the advocation of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League of Nations, they petitioned Paris Peace Conference for mandate. The theory of the petition for mandate was not an unpatriotic logic ruinous to their country or pro-American background diplomacy, but a save-the-nation diplomacy based on the spirit of national independence.

The theory of the petition for mandate claimed by Rhee, Syng-man, Jeong, Han-kyeong and Kim, Gyu-sik included the plan for gradual independence by stages for laying the foundations for Korea's sovereign independence by improving its ability under the neutral position. They put a long-range plan for independence in the petition, that is, they wanted to advance democracy in Korea of the neutral position under the United States mandat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accomplish economic growth through free trade with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And they wanted to achieve Korea's complete independence in case that an earthshaking event like the US-Japan war would break out.

The dispute over the petition for mandate which started in the early stage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d the character of a struggle for supremacy to get rid of opposed competitive forces. In a word, the dispute was carried out as part of the anti-Provisional Government and anti-Rhee, Syng-man drive. It didn't keep a constructive stance to adopt the theory of diplomatic independence in the petition as the strategy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untry.

The dispute resulted from a power competition between Rhee, Syng-man

and Park, Yong-man. The strongest criticism of the petition came from Park, Yong-man forces. Their confrontation resulted from differences in policy distinctly separated in the course of independence movement in Hawaii in the middle of 1910s. The idea of Rhee, Syng-man who advocated the theory of diplomatic independence and the theory of ability training was incompatible with that of Park, Yong-man who advocated the theory of the war of independence. Their ideological struggle violently arose over the petition again in China.

The system of the League of Nations mandate and the system of the United Nations trusteeship were designed as a measure to deal with colonies after two world wars.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an independent democratic state in South Korea through the general election under the UN surveillance after 3 year U. S. military rule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 Therefore it is needed to take a serious view of the case of Korea, which developed into a modern nation that accomplished national prosperity and defense through trusteeship that was similar to mandate.

Key words : Rhee, Syng-man, Jeong, Han-kyeong, Kim, Gyu-sik, Ahn, Chang-ho, Park, Yong-man, Mandate, Paris Peace Conference, The League of Nations,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etition for mandate, Anti-Provisional Government and anti-Rhee, Syng-man drive, Theory of diplomatic independence, Permanent neutral country.

〈자료 1〉

이승만 · 정한경이 윌슨 미대통령에게 보낸 위임통치청원서(1919.2.25)

Washington, D. C.,
February 25, 1919.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ir:

The undersigned have been authorized by the Executive Council of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which represents 1,500,000 Koreans residing in America, Hawaii, Mexico, China and Russia, to present to you the following memorial:

We, The Koreans of America, Hawaii, Mexico, China and Russia voicing the sentiment of 15,000,000 of our countrymen in Korea, lay before you the following facts:

Japan established her protectorate over Korea, after the Russo-Japanese war, in direct violation of her treaty obligations to Korea. It is a matter of diplomatic record that Korea formed an alliance with Japan at the beginning of the Russo-Japanese war to aid the latter power to win the struggle. This was done in consideration of a definite guarantee by Japan of the political independence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Korea. Taking Korea as a prize of war was a breach of covenant and of faith on the part of Japan. Neither the people, nor the Emperor, nor the responsible Prime Minister of Korea ever sanctioned the protectorate and subsequent annexation of their country. It was perpetrated at the point of the sword, as sheer might over right.

Since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the country has been mis-rul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Korean people. Natural resources are being developed, but they are exploited for the benefit of Japanese, not of Koreans. All the rights to develop the resources of the country are given to the Japanese, and the enterprise, even of the humblest sort, is insidiously hampered. The Korean merchant cannot complete with his Japanese competitor because of the preferential treatment accorded of the latter by the Japanese government. Hundreds of thousands of Japanese, unable to make a living in Japan proper, are brought over to Korea and are provided for at expense of the Koreans. Thus the Korean people are reduced to industrial serfdom, and are forced to submit to the Japanese through economic pressure.

From the standpoint of culture and enlightenment,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has brought a still greater calamity to our people. That Government made a systematic collection of all works of Korean history and the literature in public archives and private homes and burned them. All Korean periodical literature—from local newspapers to scientific journals—has been completely stamped out. The Japanese language has been made the official tongue not only in official documents but in schools as well. Educational regulations forbid the teaching of Christianity ; but not Shintoism (the national religion of Japan), and of history, geography and the Korean language in all schools in Korea. Furthermore, the regulations provide that all Korean schools shall be under the supervision of Japanese educators, and that Korean children shall be taught to salute the Japanese flag and worship the Japanese Emperor's tablet. The government does not allow Korean students to go to Europe or America to finish their education. No public gathering of any kind is allowed among the Koreans, and even religious services are vigilantly watched by Japanese gendarmes. The Christian church in Korea is insidiously discriminated against by the Japanese authorities, as

was shown by the well known "Conspiracy Case" of 1912, when more than one thousand leaders among Korean Christians were imprisoned and their beneficent activities ended.

The above is a brief summary of only a few of the many flagrant injustices to which the Korean people have been and still are forced to submit. We, the common people of Korean, with a passion for self-government and political independence, come to you, knowing that you are an arbiter of justice and a champion of equal rights for all peoples, strong or weak, with the hope that you may exert your good offices in helping we secure justice at this great time, when the destiny of subject nationalities is about to be taken up for consideration at the Peace Conference.

In the name of fifteen millions of liberty-loving Koreans, we earnestly petition you to present the accompanying memorial to the Peace Conference, and to espouse our cause of freedom at the Peace Table, so that the Allied Powers assembled at the Peace Conference will take such action as will free Korea from the present domination of Japan and place Korea under the mandatory of the League of Nations with the definite guarantee of complete independence in the future. The accomplishment of this will convert the Korean peninsula into a zone of neutral commerce to the benefit of all nations. It will also create a buffer state in the Far East which will help prevent aggrandizements by any single power and maintain peace in the Orient.

We fully appreciate the fact that it will be a delicate task for you to suggest anything concerning the fate of a people who have not been officially associated with the Allies in the war. But thousands of our countrymen fought as volunteers for th Allied cause on the Russian front for the first two years of the war. And our people in America proportionately contributed to the cause of democracy both in men and money. The American interests in Korea, industrial, commercial and religious, are such

that the United States cannot afford to be indifferent as to what is taking pl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American-Korean treaty, in which the United States pledged friendly aid to Korea, has never been abrogated or rescinded in any manner or for by the people of Korea ; nor have the Koreans, as a people, ever done anything to forfeit the friendship and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We believe, further, that, apart from these moral obligations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to aid the Koreans in their aspirations for self-determination, the United States cannot afford, for the safety of its own interests, to tolerate Japanese aggression in the Far East, and that the world cannot be made "safe for democracy" so long as 15,000,000 liberty-loving Koreans are forced to live under an alien yoke. One of your ideals for a just and lasting peace, which the Allied nations have agreed to accept as the guiding principle for settlement of questions at the Peace Conference, is that "all well-defined national aspirations shall be accorded the utmost satisfaction." This does not exclude, but surely includes, the well-defined national aspirations of the Korean people. We earnestly hope that you will initiate such action as will permit the Korean people also to recover the common birthright of freeman and to enable them to select the government under which they wish to live.

Respectfully submitted,
Syngman Rhee (signed)
Henry Chung (signed)
Representatives, Korean Nat'1. Ass'n.

〈출처〉 방선주,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235~239쪽.

〈자료 2〉

김규식이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한 위임통치청원서 국한문본(1919.4.3)

韓國委員이 講和會議에 提出한 13個條

左記

1. 1876 及 1904의 韓日條約과 1895年 日支條約에 對하야 日本이 韓國의 自主獨立 及 領土保存을 保證하기로 聲明하엿고,
2. 1894年에 日本이 淸國에 對하야 宣戰함과 1904年에 日本이 露國에 對하야 宣戰함은 全히 韓國獨立을 保全하고 東洋平和를 尊重히 한다 聲明하얏고,
3. 1882年에 韓美條約은 美國政府가 亦히 韓國 領土의 保全을 保證한다 하엿고,
4. 日本이 韓國을 占據함은 實노 公法에 違背하고 人權을 侵害함이요 1895年 保護條約에 捺印을 迫請함은 武力의 强壓에 純由함이라. 故로 我 政府가 美國政府에 呼救함이 有하엿스나 日本의 當時 勢力이 甚急하야 美國政府의 聲援이 我 政府에 未及하엿고,
5. 韓國 國民은 絕對的 日本政府 權力下 聽命하기를 不願함이오.
6. 韓國이 3世紀其間을 淸國政府의 名義上 親睦을 受함이 雖有이나 保護 外에 完全히 獨立의 體裁로 4,200百餘 年間 言語文字와 政敎事業이 燦然 自由하엿고,
7. 韓國은 東洋의 鎖鑰을 作한지라. 假令 1,870餘萬의 韓人으로 하여곰 1日이라도 日人의 苛虐을 受하던지 一日이라도 其自由의 恢復을 不得하면 東洋은 必히 一日이라도 平和를 不得할지라. 故로 巴爾幹,靑島의 覆轍을 不蹈하며 世界의 大戰爭을 欲免함이니 韓國으로 하여곰 獨立恢復치 아니함이 不可하며,
8. 假令 韓國이 自由를 不得한다 하면 日本의 勢力이 滿洲,西比利亞에

日益進取하야 其野心을 擴大하야 亞細亞 民族으로 彼의 君權과 武力下에 屬服케 할지요.

9. 日本이 如其 亞洲覇權을 得하면 列强 各國의 經濟와 其商業의 大害가 必有하겻고,
10. 韓國이 日本의 武斷政治를 受한 以來로 其所受의 壓迫과 歷史上 未曾有의 加虐을 加하야 我의 言語를 撲滅하며 我의 智識을 制限하야 韓族으로 하여곰 世界에 滅絕케 하랴는 勢가 有하고,
11. 今日 韓國의 獨立恢復을 要求함은 1870餘萬의 同胞 全體의 同意에 出함인대 最近 3月 1日 三百餘萬 韓人의 獨立運動은 全國 同日 擧事하야 足히 韓人의 萬衆一心을 表示할지오.
12. 我 韓民族은 天性이 堅强하야 受怨必報함이어날 積日已深하야 日人을 더브러 勢不兩立한 故로 完全히 恢復獨立을 不濟하면 一日이라도 苟活하기 不能할지요.
13. 列强 諸邦이 如其 吾 韓國에 同意를 與하야 永久中立을 得케 할지면 我 韓人은 欣覩히 願함이니 單히 日本이 其間에셔 優越權를 行使함만 不願함이라.

1919년 4월 3일 신한청년당 대표 김규식

〈출처〉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자료번호 5-001103.

〈자료 3〉

김규식이 파리평화회의에 제출한 위임통치청원서(1919.4.5)

Paris, France, April 5th, 1919

TO THE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PARIS, FRANCE.

Sirs,

The undersigned delegated by the New Korean Young Men's society representing the 18,700,000 Korean people domiciled in Korea, Manchuria, Siberia, America and elsewhere, beg to submit the accompanying memorandum concerning Korea's claims for liberation and would earnestly ask your distinguished Conference to grant us a just and impartial judgement after your careful investigation and full consideration of the question.

We base Korea's claims for independence on the followings grounds:

1. Japan guaranteed the perpetual independence and integrity of Korea by her treaty with Korea in 1876 at Seoul, with China in 1885 at Tientsin and in 1895 at Shimonoseki, and again with Korea in 1904. Also Japan declared war against China in 1894 and against Russia in 1904 on the ground that the independence of Korea and the peace of the Far East was her paramount aim.

2.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uaranteed the integrity of Korea by the treaty of 1882.

3. Japan acquired Korea by internationally illegal means only, having forced the treaty of Protectorate in 1905 at the point of the sword ; and this treaty was never properly signed and sealed and was declared null and void

by the then Korean Emperor in his appeal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4. The people of Korea never acquiesced to submit to Japan's rule.

5. With the exception of a few centuries Korea has had her independent existence for more than 1200 years with her own language and culture, as a distinct race from Japan and gave to Japan her start among the civilized groups of mankind.

6. Korea being the key to the Far Eastern question Asia will never have permanent peace as long as Korea's 18,700,000 people are bleeding and crying for deliverance.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avert another great war, and if Korea is not liberated now and the Far East is left in the same condition in which the Balkans were before the war it will be another case of the same results following the same conditions.

7. Aside from the question of "the consent of the governed" Korea's case is different from the other Asiatic possessions of the Powers. India was conquered, Annam was ceded to France by China and the Philippines likewise to America to Spain, Japan has no claim whatever on Korea.

8. Unless Korea is liberated now and Japan's advance into Manchuria and Siberia checked the latter will soon realize her ambition of bringing all or most of Asia under her imperial flag and militarism.

9. Economically and commercially Japan's asiatic hegemony will prove detrimental to the vital interests of the western Powers and the world at large.

10. Korea is now being governed by the most oppressive military rule ever known in history, and the nation is being emasculated and on the verge of becoming extinct. Japan is trying to exterminate the Korean language and annihilate the Korean people as far as possible.

11. It is the unanimous sentiment and will of the entire 18,700,000 Korean people to be liberated, as shown by the recent ope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on March 1st by a united body of more than 3,000,000 people in all the principal cities of Korea.

12. On account of the strong inherent racial feeling, which is growing more and more into a bitter hatred as the days go by since the Japanese occupation, Koreans could never live peacefully under an alien race like Japan even if a certain amount of freedom were allowed. Korea would rather submit herself to an international supervision for a probationary period, provided Japan is not a member of such a supervisory group.

The Korean people beg of your Conference to appoint, if necessary, a commission to hear our case and to ultimately allow us a voice in your august council.

IN BEHALF OF THE PEOPLE OF KOREA
Kiusic Kimm (signed)
Representative of THE NEW KOREAN YOUNG MEN's SOCIETY

〈출처〉 Wilson Papers, Microfilm, Reel No. 339, "To the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